

KITA

통상리포트

2025
VOL.01

2025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 험난한 風波, S.T.O.R.M.에 대비하라!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KITA

TRADEREPORT

2025

2025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발행인 윤진식

편집인 장상식

발행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통상연구실

발행일 2025년 1월 13일



CONTENTS

2025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 험난한 風波, S.T.O.R.M.에 대비하라!

요약

S : 안보와 생존(Security & Survival)	01
T : 아름답고 위협적인 관세(Tariff)	07
O : 보호무역을 촉발하는 중국발 공급과잉(Oversupply)	15
R : 자원(Resources)의 新무기화	23
M : 제조업 부흥(Manufacturing) 경쟁 2막	29

조성대 실장 (02-6000-5600, sd.cho@kita.or.kr)



※ 본 리포트 인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2024년 세계가 주목한 미국의 선거는 트럼프 후보와 공화당의 압승으로 종료되었다.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인은 3번의 선거 중 가장 많은 표와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얻었다. 공화당은 상원 다수당을 탈환했고, 하원 다수당을 지켜냈다. 미국 선거에 전세계 이목이 집중된 이유는 트럼프 당선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곧 향후 4년간 자국의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경영전략 수정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회복이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2기의 미국발 공격적 통상조치와 주요국의 대응이 만들어낼 통상환경은 우리 수출기업에 큰 도전이 될 것이다. 2025년 통상환경을 ‘풍파(風波)’를 의미하는 다섯 개의 알파벳 ‘S.T.O.R.M.’으로 풀이하고자 한다.

S 국가안보를 이유로 사문화에 가까웠던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를 적용한 트럼프 1기만 해도 기업들에게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는 체감하기 어려운 의제였다. 232조 조치가 건재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경제안보를 이유로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 중심으로 공격적인 수출통제조치를 취했다. 트럼프 2기에서는 경제안보의 대상을 보다 확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 투자 확대기반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 하에 공격적인 관세조치와 오프쇼어링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U에서도 재집권에 성공한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경제안보에 나설 예정이다. 환경, 노동 등 가치를 중요시한 산업 및 통상정책이 미중 패권 경쟁 속 한계를 드러내고 자칫 EU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 판단한 EU는 공급망 리스크 축소, 친환경 산업경쟁력 강화, 통상리스크 대응 등 경제안보 강화에 나선다. 실질적인 안보 이슈인 2개의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나, 포성이 멈추더라도 실물경제 회복에 이르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안보가 기업경영과 무관하다고 보는 시각은 없을 것이며, 2025년은 **안보(Security)**가 곧 **기업 생존(Survival)**에 핵심 요소가 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T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기간 중 적극적인 관세조치를 약속하며,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까지 표현했다. 관세가 거래의 일 당사자에게 아름답기 위해서는 또다른 거래 당사자에게 위협적이고 부담을 줘야 가능하다. 모든 국가와 모든 제품에 대한 관세인상(보편관세), 미국에 높은 관세를 부담시키는 국가를 상대로 같은 수준의 세율로 대응(인상)하는 새로운 관세(상호대응세율), 추가적인 대중국 고율의 관세 등은 자칫 지난 80년간 글로벌 통상환경을 지탱해온 규범의 중대한 위반이 될 것으로 보여 국내외 많은 이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국제규범과의 충돌을 떠나 미국의 대통령은 이미 현행법상 조치를 활용해 관세를 인상할 수도, 새로운 관세조치를 부과할 수도 있다. 별도의 입법절차 없는 이러한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그 절차가 신속하게 전개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공급과잉, 우회수출, 보조금 등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과 EU의 무역구제(또는 수입규제) 규범 변화는 중국과의 공급망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기업에게 또다른 관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에 대해 사실상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트럼프발 **관세(Tariff)** 리스크는 타국에 비해 적을 수 있으나, 기업에게는 단순한 거래 비용 외에 투자, 공급망 변경 등 글로벌 경영전략의 대대적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O 중국은 개혁개방과 함께 강력한 제조업 육성정책을 펴왔다. 2000년 WTO 가입과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위상을 다졌고, 그 과정에서 설비 증설과 수출 신장으로 이중의 승수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1기에서 시작된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바이든 정부 들어 더욱 촘촘해지고 강화되었으며,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 시장이 막히고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경기위축 속에 자체 구조조정 기회를 놓치는 가운데 증설을 지속해온 중국은 일부 업종에서 글로벌 수요를 초과하는 과잉설비를 갖추기에 이르렀다. 중국발 공급과잉 현상은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 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신사업으로까지 번진 상황이다. 미국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조치와 301조 관세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 미국처럼 강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EU 점차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선진국 뿐만 아니라 멕시코, 브라질, 튀르키예, 인도, 태국 등 신흥국도 중국발 공급과잉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제한 조치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한층 강해질 관세조치와 대중국 우회수입 방지조치 등이 예상됨에 따라,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산 제품은 한국 또는 제3국으로 진출해 우리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 특히 **공급과잉(Oversupply)**에 더 많은 국가가 대응에 나서 글로벌 보호무역 움직임을 가속화할 경우 수출기업은 이중고에 직면할 수 있다.

R 미중 패권경쟁 심화 속 자원정책과 경쟁도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에서부터 화석 연료 생산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을 부정적으로 보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도 있으나, 동시에 미국 소비자가 인플레이션을 체감하는 요소 중 하나가 유가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부진으로 화석연료 소비가 줄어드는 가운데 미국이 셰일가스와 석유 생산을 확대하면 국제유가의 하방요인이 커질 수 밖에 없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에 관계없이 대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낮춰갈 예정이다. 미국과 EU의 화석연료 에너지 정책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은 압도적으로 생태계를 장악한 태양광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패권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응할 수단으로 중국이 핵심광물 공급망 통제 고삐를 더욱 조일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자원(Resources)**의 신무기화 현상은 특정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자원 리스크 대응을 촉진시킬 것으로 보이며, 유사한 입장에 선 국가간의 협력 뿐만 아니라 대중국 관계 개선 노력을 확대하려는 국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M 미국의 경제안보와 관세조치의 궁극적 목적은 제조업 경쟁력 확보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1기에 이어 다시 지난 선거에서도 내걸었던 ‘Make America Great Again’ 구호의 ‘위대함’을 실현시키는 분야 중 하나가 제조업이기 때문이다. 2차 대전 이후 최대 제조업 강국이었던 미국은 철강, 자동차,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점차 잃어버렸다. 80년대 플라자 합의나 2000년 전후 통상압력으로 상대국을 압박했던 사례가 있었으나, 현재 미국이 다양한 수단으로 견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제조업 전반에 걸쳐서 위협적인 수준으로 성장했다. 바이든 정부에서 IRA, CHIPS Act 하의 당근(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제조업 경쟁력 회복을 도모했던 미국은 트럼프 2기에서는 채찍(관세)으로 압박해 투자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경쟁력 약화에 고심 중인 EU도 대규모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규제완화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트럼프 관세, 중국의 공급망 압박, 역내 자원 부족이라는 3중고와 싸워야 하는 상황이다. 2025년은 많은 국가들이 **제조업 부흥(Manufacturing Renaissance)**을 놓고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센티브 욕망을 가리며 경영전략을 마련해야 할 기업의 고민은 더욱 커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S 안보와 생존(Security & Survival)

1. 美 트럼프 2기의 경제안보 정책 전망

□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본격 시작된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정밀·심화

표1. 美 행정부별 경제안보 정책 추진 현황

2017~2020년 트럼프 1기 행정부	2021~2024년 바이든 행정부	2025~2028년 트럼프 2기 행정부
America First	Small Yard, High Fence	Large Yard, High F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안보가 곧 국가안보 - 양자간 거래 선호(TPP 탈퇴, NAFTA·한-미 FTA 재협상 등) - 232조, 301조 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산업 표적관세, 수출통제, 투자제한 등 - 중국 디커플링 대신 디리스팅 - 공급망 다변화, “프렌드쇼어링” - 보호주의 산업정책 (국내 제조업 보조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커플링에 가까운 디리스팅 - 관세, 수출통제, 투자제한+@ - 프렌드쇼어링 대신 “온쇼어링” - 무역협정 재검토(USMCA 등)

□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경제를 안보의 핵심요소로 간주, 무역 불균형 해소와 미국 제조업 부흥을 강조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을 본격화

○ 무역법(Trade Act of 1974) 201조와 301조,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232조에 근거하여 여러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대대적인 보호무역조치 도입

표2.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조치

2017~2020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대상 품목	조치 내용
통상법 201조	태양광 셀·모듈	4년간 셰이프가드
	대형 가정용 세탁기·부품	3년간 셰이프가드(20~50% 관세)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알루미늄	각각 25%, 10% 관세 한국: '15~'17년 평균 수출물량 70% 쿼터
통상법 301조	광범위한 품목	1~4차례 고율관세 부과 (‘20~’21 7천억\$ 규모 무역합의 체결 ¹⁾)

1) 중국은 미국의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 에너지, 서비스 등의 수입을 확대했으나 ‘1단계 무역합의’ 내용을 완전히 이행하지는 못했으며, 이후 코로나 19 팬데믹이 발생하고 미국의 정권이 교체되며 미-중간 체결한 ‘1단계 무역합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

-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을 추진하며, 기술 유출 방지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對중국 견제 강화
 - '18년 美 의회는 중국 기업과 對중국 투자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민감 분야에 대한 對美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기존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권한을 확대하고 심사 대상 범위를 넓힌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도입²⁾
 - '18년 수출통제와 관련한 일체 권한을 대통령에게 영구적으로 위임하는 '수출통제개혁법'(ECRA)이 의회를 통과하며, 美 행정부가 반도체의 對중국 수출통제를 보다 수월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발판 마련³⁾
- 다자 협력보다는 양자간 거래를 통해 무역협정을 재협상하며 미국 이익 극대화
 - 취임 직후 TPP 가입 철회와 파리협약 탈퇴를 선언했으며, WTO에서 미국의 국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보고 WTO 탈퇴까지 고려
 - '18년 '북미자유협정'(NAFTA) 재협상을 통해 6년마다 협정 이행사항 검토 조항을 포함한 USMCA를 체결했으며, 당시 對한국 무역적자를 문제 삼아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 '19년 개정된 협정 발효
-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주의와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접근에서 탈피했으며, 경제안보를 기술 패권과 공급망 안정화에 초점**
 - 바이든 행정부는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관세 대신 관세쿼터로 대체하고 그 밖의 232조 관세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며 트럼프 1기의 무역법 201조와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의 관세정책을 큰 틀에서 승계
 -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을 차단하기 위한 수출통제 강화
 - '23년 '해외투자심사제도'(Outbound Investment Security Program)를 신설, '24.6월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는 규칙 제정안 공시⁴⁾
 - 반도체 제조시설, 첨단 컴퓨팅, AI 반도체, 슈퍼컴퓨터 등에 대한 對중국 수출제한 강화 조치 이후, '24.9월 양자 컴퓨팅, 첨단반도체 제조 등 핵심 신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포함⁵⁾
 -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 세액공제와 보조금을 제공하며 자국 내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정책 적극 추진⁶⁾
 - '22년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신통상의제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통상규범을 구축하고자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2) 김민배(2024.6.), "첨단기술의 보호와 투자규제", 전략물자관리원 학술지 통권 제7호.

3) 김혁중·오종혁·권혁주(2023.12.),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확대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 KIEP 연구보고서 23-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법률신문(2024.7.), "美 재무부,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규칙 제정안 공시", 법률신문.

5) 박태호(2024.11.), "트럼프 대통령 2기 세계경제전략 및 산업통상정책과 한국의 대응", NEAR 재단.

6) Ibid.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경제안보 정책을 통해 산업 보호와 고용 창출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미국 자원의 해외투입을 최소화하고 상호이익에 기반한 양자간 거래방식을 통해 힘을 바탕으로 한 일방주의와 비개입주의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중국과 관련성이 높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對美 투자에 대한 CFIUS 심사가 엄격해지고, 기술유출 방지 등을 위해 對중국 수출통제의 이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중국 상품의 수출과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수입규제와 對중국 수출통제 및 '해외우려집단'(FEOC)에 대한 규정 강화 조치가 우리 업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對중국 컴플라이언스 주의 필요
 - 반면 중국의 기술탈취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외국인투자규제 강화와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되는 경우 일부 반사이익 가능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보호무역적 성향을 강화하며 다자 또는 동맹국과의 협력보다는 미국 중심의 일방적 무역 정책을 추진하며 관세를 핵심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
 -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에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 수준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는 60%로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공언했으며⁷⁾, '상호무역법'⁸⁾을 통과시켜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추진하겠다고 약속
 - 무역확장법 232조를 이용하여 승용차나 정보기술 관련 제품 등에 대해 관세 인상 가능성⁹⁾
 -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한 IPEF를 폐기하고, 파리협약 재탈퇴 등 여타 국제협약체 탈퇴 또는 파기 가능성
 - USMCA의 원산지 규정 개정을 통해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중국 자동차의 對美 수출 차단을 예고하며, 무역적자가 큰 국가들에 대한 압박 강화 예상
- 트럼프 2기는 미국을 제조업 강국으로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
 - 해외 아웃소싱 중단, 철강·자동차·방위·에너지·AI 등 주요 핵심 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 친기업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이며, 인프라 투자 확대 및 국내 실물경기 부양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
 -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하고 중국에서 보조금을 받고 과잉생산된 상품이 싼 값으로 미국에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 등 무역구제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¹⁰⁾
 - 대미 투자 외국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이 축소될 수 있으며, USMCA 등의 기존 무역협정 개정 가능성도 북미 지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불확실성 야기

7) Leonard, Jenny(2024.10.16.), "In Trump's Economic Plan, Tariff Is the Most Beautiful Word.", Bloomberg.

8) 상호무역법은 특정 상황에서 대통령이 미국산 수출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위해 특정국과 협상하거나 특정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대통령에게 관세·비관세 조치와 관련하여 큰 권한과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며, 공화당이 상하 양원 모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며 상호무역법이 트럼프 2기 임기 안에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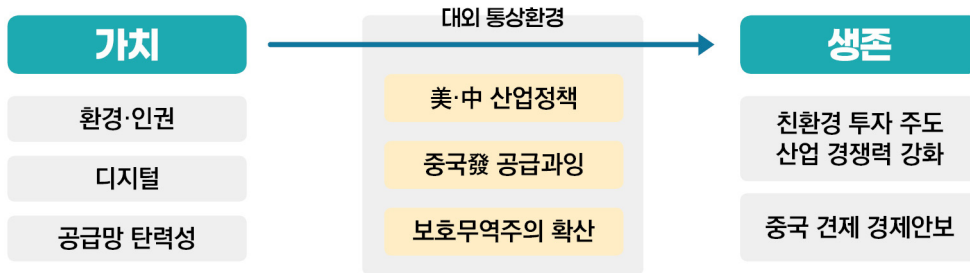
9) 박태호(2024.11.), op. cit.

10) Ibid.

2. 유럽연합(EU)의 경제안보 정책 전망

- 12월 2일 출범한 폰 데어 라이엔 2기 집행위는 환경·인권 등 가치(value)에 기반한 입법과 정책을 추진한 1기와 달리 EU가 실존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 속 생존을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경제안보에 방점을 둘 것으로 전망¹¹⁾

그림1. 폰 데어 라이엔 1기와 2기 통상정책 변화



자료: 한아름(2024)

- 폰 데어 라이엔 1기 집행위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 정책 기조 하에 디지털전환, 지속가능한 성장, 탄소중립을 위한 가치 기반 통상정책을 추진¹²⁾
- 환경 및 디지털 분야에서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여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으며, 다자간 협력을 통해 규범 중심 통상질서를 유지하고자 노력
 - 코로나19로 EU의 공급망 취약성이 부각됨에 따라 역내 친환경·디지털 공급망 강화 정책과 공급망의 중국 편중을 완화하기 위한 對중국 디리스팅 정책 확대

표3. 폰 데어 라이엔 1기 통상정책 및 주요 입법

지속가능 무역	공급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딜(Green Deal)을 통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공급망실사지침(CSDDD) -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통한 친환경 산업 육성 강화 - 탄소중립산업법(NZIA) 및 핵심원자재법(CRMA) - 유럽 반도체법 및 ‘지속가능 배터리 규칙’ -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CTF)
디지털 주권 확보 및 표준 정립	공정경쟁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 - 데이터거버넌스법(DGA) 및 데이터법(Data Act) - AI법(AI Act) - 사이버복원력법(C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외보조금규정(FSR) -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자료: 한아름(2024)

11) 한아름(2024.12.19.), “폰데어라이엔 집권 2기 EU 통상정책 : 심화되는 美·中 경쟁 속 생존 전략”, 통상리포트 Vol.13, 한국무역협회.

12) Ibid.

- 폰 데어 라이엔 2기 집행위는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과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망 안정성 확보, 경제안보를 우선시할 것으로 전망¹³⁾

표4. 폰 데어 라이엔 2기 통상정책 방향

경쟁력 제고	경제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투자 주도 EU 산업경쟁력 강화 - 美·中에 버금가는 대규모 투자 - 기업 발목 잡는 과도한 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덤핑,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강화 - 역외보조금규정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적극 대응 - 수출통제 및 투자제한 - 중국기업 투자에 '기술이전, 유럽산 사용' 조건 제시

자료: 한아름(2024)

- '18년 관세 부과 이후 미국에서 중국산 수입 점유율이 급감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EU의 중국산 제조상품에 대한 의존도는 '18~'23년 큰 폭으로 증가
- EU는 중국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잇달아 개시했으며, 한국산 예폭시 수지도 조사대상에 포함
- '23년 하반기~'24년 상반기 신규 조사 개시 건수는 총 19건으로 전년 동기 4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19건 중 15건이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수입규제 강화 기조로 인해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
- 폰 데어 라이엔 2기에서 역외보조금규정(FSR) 적용 확대 가능성에 주의할 필요
- FSR은 EU 내부시장을 왜곡하는 제3국 보조금을 받은 외국 기업의 EU 역내 기업결합,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반덤핑·상계관세 대비 집행이 빠르고 특정 기업을 겨냥한 집행위의 직권조사가 가능
- FSR 시행 이후 개시된 조사 6건 중 5건이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나, 非중국 기업도 대상이 될 수 있음
- '23.6월 채택된 'EU 경제안보전략'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24.1월 '경제안보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으며, '25년 입법 본격화 전망
- 모든 회원국의 외국인투자(FDI) 심사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며, 통일된 심사 최소요건과 필수 심사대상 산업·기술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통제 대상 품목의 신속한 개정절차를 마련하고, 아웃바운드 해외투자 모니터링, 위험 식별 및 평가, 규제방안을 마련

13) Ibid.

3. 우크라이나 전쟁과 양안 관계

- (우크라이나 전쟁)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에 따라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휴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전쟁 당사국간 입장 차이가 커 종전까지는 상당한 시간 소요 예상
-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취임 후 24시간 이내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트럼프 2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대폭 줄이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현재 전선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가능성¹⁴⁾
-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사실상 인정하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장기간 배제하는 조건을 포함할 가능성
- 트럼프 당선인의 종전 계획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현재 전선 동결 수용여부도 미지수¹⁵⁾
- 러-우 전쟁이 종료되어도 거래 정상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신중한 준비 필요

그림2. 러-우 전쟁 경과 및 전망

배경 및 경과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압박	러시아의 보복조치	북한의 참전	2025년 전망
'22.2.24.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명분 NATO의 동진 반대 러시아의 영향권 복구 경과 키이우 점령 실패 후 교착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EU, 한국 등 전세계 45개국 대러 제재 동참 에너지 금수, 금융 제재, 수출통제, 자산 동결 등 러시아는 자본통제와 에너지 수출 다변화로 경제 방어 미국, EU 등 54개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경제/인도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통제, 채권상환 거부 천연가스 공급 제한 : 노르드스트림 운영 중단 흑해 곡물협정 파기 비우호국 지정 : 미국, EU, 한국 등 48개국 핵무기 사용 가능성 언급 	20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北 러시아측 참전, 1만1천~10만 명 병력 파견 추정 러시아는 병력 부족 보완, 北은 군사기술과 재정지원 확보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트럼프 행정부 복귀에 따라 협상/휴전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 양측 입장 차이 커 조기 휴전/종전은 어려울 수도 전쟁 종료되어도 거래 정상화에는 상당한 시간 소요 전망-신중한 준비 필요

- (양안 관계) 중국-대만 양안 관계는 개입에 부정적인 트럼프 당선인의 입장 속 긴장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대만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려 할 것으로 예상
- 트럼프 당선인은 대만 방어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약속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대만의 안보를 거래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¹⁶⁾
- 대만을 중국 견제의 수단으로 활용하며 중국이 특정 사안에서 양보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대만에는 고가 무기 구입 및 방위비 부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반도체 생산 이전 등을 요구할 가능성¹⁷⁾
- 중국은 트럼프 당선인이 대만 독립을 지지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대만을 협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¹⁸⁾, 대만은 미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며 국방 및 경제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¹⁹⁾

14) 이한나(2024.11.15.), “트럼프는 러시아·우크라전을 어떻게 끝낼까?”, 주간조선.

15) 정의길(2024.11.7.), ““24시간 안 종전” 장담 트럼프...우크라, 가자 전쟁 전환 맞나”, 한겨레.

16) 이본영(2023.9.19.), “트럼프 “난 대만 방어 약속 안 해”...미 대선에 출령이는 국제 질서”, 한겨레.

17) 이지원(2024.11.7.), “방위비 압박에 반도체 투자 요구까지...“대만정책 변화 클 것”, 아주경제.

18) 권숙희(2024.11.7.), “중전문가들 “트럼프, 대중국 협상카드로 대만 활용 우려””, 연합뉴스.

19) 김철문(2024.11.7.), “대만, 국가안보회의 개최...미중 포함 3자관계 변화 대응 모색”, 연합뉴스.

T 아름답고 위협적인 관세(Tariff)

1. 트럼프 2기의 '아름다운' 최종병기 '관세'

- 美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간선거('26.11월) 前 의회 입법 및 행정명령을 활용해 적극적 관세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
- 트럼프 행정부 2기 내각은 1기 보다 '로열티'가 높은 인사들로 지명되었고,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게 되어 임기 첫 2년 동안 관세 관련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상황
-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관세 분야를 포함해 최소 25개의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²⁰⁾, 트럼프 당선인 측근 인사들은 감세로 부족해진 세수(稅收)를 관세 인상으로 충당하는 내용을 세법 패키지 법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의회와 이미 논의 중²¹⁾

표5. 미국의 추가 관세조치 근거

근거 법령	주요 내용	기준 사례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특정 수입의 국가안보 위협 여부를 조사해 필요시 관세 및 수입제한 조치 적용	트럼프 1기 도입된 철강, 알루미늄 232조 조치 적용중
1974년 통상법 301조	무역상대국의 불공정한 관행에 따른 피해 발생 시, 해당국과 협의하고 합의 못하면 관세 및 수입제한 조치 부과	트럼프 1기 도입된 301조 조치는 바이든 정부에서 추가 적용중
1930년 관세법 338조	타국의 불합리한 규제 및 차별대우로 불이익 발생시 최대 50%까지 관세 부과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수입금지	관세위원회 조사 선행. 1949년 이후 조사 및 논의 없음
1974년 통상법 122조	심각한 국제무역수지 적자, 중대하고 급박한 달러가치 하락 등의 경우 최대 150일 15% 미만 관세부과, 수입쿼터 등 조치	적용 사례 없음
1977년 적성국교역법	전시 또는 국가비상사태 기간에 해외거래를 조사, 규제 또는 금지	1971년 닉슨 행정부는 4개월간 10% 관세 부과
1977년 국제비상경제수권법	비(非)전시 비상사태시 국제금융규제, 외국정부 및 외국인 관련 자산규제, 적대국 자산 몰수 경제 제재	인권탄압, 민주주의 수호 등 이유로 동 법 근거 조치 시행. 트럼프 1기 멕시코산 수입에 관세 부과 전 양자 합의로 취소

자료: CRS

20) Holland, Steve et al(2024.12.18.), "Here's what we know about Trump's planned executive orders so far," Reuters.

21) 지출·세입·부채한도 관련 법안의 경우 '조정권(Reconciliation)'을 이용해 필리버스터를 피해 갈 수 있어 입법이 용이. Bade, Gavin and Benjamin Guggenheim(2024.11.7.), "Trump world, Congress discussing how to raise tariffs by legislation," Politico Pro.

□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하 IEEPA) 등을 활용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보편관세 언급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높은 특정 국가, 품목 타깃 가능성에 주의 필요

○ IEEPA는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차적 요건이 간소하고 대통령에게 포괄적 권한을 부여하여 관세 부과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

- 동 법은 대통령이 무역 제한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의회와 협의하고 조치 이행 현황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의회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의회와의 협의 규정도 임의규정에 불과²²⁾

○ 트럼프 당선인의 국경, 마약 등을 이유로 한 관세 위협은 IEEPA 발동 요건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

-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재임 당시에도 ‘국경 위기 대비를 위한 긴급조치’ 성명을 발표(‘19.5.30.)하고, 멕시코의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5% 관세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최대 25%까지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관세 부과 예정 3일 전 합의(‘19.6.7.)를 통해 조치를 무기한 보류한 바 있음

○ 보편관세나 상호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전 세계, 전 품목에 적용하기보다는 특정 국가, 품목을 타깃하여 상대국의 관세 인하를 압박할 가능성

□ (대중국 관세) 기존 301조 조치를 활용해 단기간 내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시도할 수 있으며, 전면적인 관세 부과를 위해 MFN 지위를 철회하거나 중국 기업의 제3국 생산 제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

○ 대중국 고율 관세 공약 이행을 위해 공화당 주도의 의회에서 중국에 부여된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철회를 법제화할 수 있음

*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PNTR) : 미국이 중국의 WTO 가입 시 (‘01년) 시장개방 조건으로 부여했던 美 국내법상 MFN 지위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USTR 대표로 지명된 제이미슨 그리어는 하원 세입위 청문회(‘23.4.18.)에서 중국의 PNTR 지위 박탈 후 즉각 관세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매년 NTR 부여를 위한 승인절차를 거치는 것만으로도 중국의 무역 관행을 상당 부분 규율할 수 있다며 PNTR 철회를 지지²³⁾

○ 기존 대중국 301조 관세의 인상은 중국에 쉽고 빠르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

- 301조 조사 및 당사국과의 양자협상 기간은 12~18개월로 규정되어 있어 관세 등 보복조치 시행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나, 기존 조치 대상 국가·품목은 유지하되 관세율만 인상하는 등의 변경(modification)은 간단한 절차로 가능²⁴⁾

- 기존 301조 관세 적용 품목은 트럼프 1기 조치 이후로 대중국 수입 비중이 감소하여 물가 영향도 제한적

22) 법무법인 세종(2024.4.25.), “미 대선 “트럼프 재집권” 시 우리 기업의 미국 비즈니스에 미칠 영향: 對 미국 전기차/배터리 투자 및 무역 정책을 중심으로,” 법률신문.

23) 한아름(2024.6.10.), “미 의회 대중국 견제 입법 동향 및 시사점,” 통상리포트 Vol.5, 한국무역협회.

24) Covington(2024.11.25.), “Trade Policy Under a Second Trump Administration and Implications for Business”.

- 관세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법을 통해 수출국이 아닌 기업(entity)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으나, 이는 의회의 입법을 필요로 함²⁵⁾
- 최근 美 상원에서 중국 기업이 제3국에서 생산한 자동차도 중국산 자동차로 간주해 관세를 부과하는 복수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무장관 지명자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발의한 '자동차 관세 허점 방지 법안'(24.3월)'도 포함
- (232조·301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조치가 부활하거나 강화될 수 있으며, 232조·301조 규제 품목이 자동차, 레거시 반도체 등으로 확대될 수 있음
-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를 대체하여 적용되는 수출 쿼터의 축소를 요구하거나, 관세를 재부과 또는 인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각 25%, 10%의 232조 관세를 부과했으나, 이후 협상을 통해 한국산 철강은 수출 쿼터를 적용받고 있으며, EU, 일본, 영국은 저율할당관세(TRQ) 적용
- (자동차)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을 지목하며 고율의 관세를 공약한 만큼, 232조를 관세 부과 수단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음
-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국가안보 이유로 232조 조사를 개시('18.5월)하였으나 관세 조치로 이어지지 않음
-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소프트웨어·부품을 탑재한 차량의 판매 금지 규정('24.9월 발표) 등 커넥티드 차량의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조치가 확대되고 있어 232조 조치의 법적 근거는 충분
- 트럼프 인수위원회는 배터리, 주요 광물 및 충전 부품을 포함한 전기차 공급망 관련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232조 관세 부과 및 동맹국과 개별 관세 면제 협상을 권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²⁶⁾
- (레거시 반도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까지 301조 조사를 확대('24.12.23.)²⁷⁾했으며, 조사 결과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가 내장된 다운스트림 제품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²⁸⁾
- 레거시 반도체는 일반적으로 반도체 자체로 수입하기보다는 완제품의 일부로 수입되기 때문에 동 조사는 방위, 자동차, 의료기기, 항공우주 등 핵심 산업 최종 제품의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 사용 현황에 대한 조사를 포함²⁹⁾

25) Ibid.

26) Renshaw, Jarrett and Chris Kirkham(2024.12.18.), "Exclusive: Trump transition team plans sweeping rollback of Biden EV, emissions policies," Reuters.

27)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2024.12.30.), "Initiation of Section 301 Investigation: Hearing; and Request for Public Comments: China'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Targeting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for Dominance," 89 FR 106725.

28) Swanson, Ana(2024.12.16.), "Biden Prepares to Target Chinese Legacy Chips With Trade Investigation," The New York Times.

29)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2024.12.30.), op.cit.

- 조사 결과 레거시 반도체 뿐 아니라 다른 완제품에 내장된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에도 관세를 적용하는 ‘부품 관세 (component tariff)’가 도입될 수도 있음³⁰⁾

□ 미국의 관세조치 후 제3국의 보복관세가 잇따르면 글로벌 무역질서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며, 1기에서와 같이 주요국과 양자무역합의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멕시코, 캐나다, 중국, EU, 일본, 베트남 등 각국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부터 LNG, 항공기, 무기 등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 공급망 협력 강화, 대미투자 확대 등 관세조치를 피하기 위한 협상안을 모색 중

표6.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위협에 대한 주요국 대응 현황

국가	과거 사례	관세 위협에 대한 대응 현황 및 전망
멕시코 ·캐나다	- NAFTA 폐기/개정 요구 이후 삼자협상을 통해 NAFTA 대체 USMCA에 합의	- (멕시코) 보복관세 가능성 제기하며 맞대응하는 동시에 국경 단속 강화를 약속 - (캐나다) 고율관세 피하기 위해 국경안보 강화 계획 수립하는 한편 우라늄·원유 등 보복관세 검토중 - 국경 문제는 ‘26년 USMCA 검토 의제’에도 포함 가능
중국	- 1,1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 부과 - 2,0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 추가 수입 조건 1단계 무역 합의	- (보복조치) 美 수출통제 강화에 중국산 흑연, 안티모니 등 핵심광물의 對美 수출통제 및 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 개시 발표 - (협력강조) 관세 위협에도 양국 간 협력을 강조하여 특정 기업, 특정 품목을 겨냥한 보복조치를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 - (무역합의 전망)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未이행, 중국의 대미투자에 대한 美정치권 부정적 시각으로 합의 난항 예상
EU	- 철강, 알루미늄 232조 관세에 대해 보복관세 부과 - ‘20년 美 대선 앞두고 상호 관세 인하 합의 ³¹⁾	- 미국산 LNG 수입 확대 제언(‘24.11.9.) - 농산물, 무기 구매 확대 및 美 기업들의 역내 군수품 조달 참여 허용 등 검토중 ³²⁾

자료: 저자 작성

□ 관세는 한국의 대미 수출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이 제3국에서 구축한 공급망에도 부정적 영향

○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위협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의 대미 직접수출 뿐 아니라 우리 기업이 중국, 멕시코, 베트남 등 제3국에 구축한 공급망에 대한 타격 우려

30) Swanson, Ana(2024.12.16.), op.cit.

31) ‘20년 美대선을 앞두고 미국산 랑스터에 대한 관세를 폐지함으로써 트럼프의 메인주 지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크리스탈 유리 등 EU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를 이끌어내는 합의를 함.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2024.11.7.),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통상리포트 Vol.12, 한국무역협회.

32) 한아름(2024.12.18.), op.cit.

- 천연흑연 등 전기차에 사용되는 핵심광물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중국의 채굴·가공 비중이 높고 단기간 내 공급망 다변화가 어려워 미국에 기투자한 우리 전기차, 배터리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바이든 행정부도 천연흑연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감축법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에 따른 중국산 조달 제한 요건 적용을 2년 연기했으며, 301조 관세 시행도 2년 연기한 바 있음
- 특히 북미3국 자동차 공급망은 통합도가 높아 완성차 단계 전 수차례에 걸쳐 부품이 국경을 이동하여, 관세에 따른 비용 부담이 가중됨³³⁾
- 관세조치가 시행되더라도 미국 제조 공급망에 대한 우리 기업의 기여도를 적극 설득함으로써 면제를 이끌어내고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
- 대미 수출기업은 미국 내 수입자와의 협력을 통해 관세 조치가 미국 내 생산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적극 소명하고, 미국에 기투자한 기업은 고용창출, 세수(稅收) 등 미국 경제 기여도를 적극 내세울 필요
- 개별 기업에 대한 관세 면제 절차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경쟁업체 대비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 확보 가능
- 트럼프 1기 관세 면제 신청 7,000건 검토 결과, 우호적인 기업에 관세 면제 가능성 높았다는 연구 결과³⁴⁾도 있어 참고할 필요

33) Meltzer, Joshua P. (2024.12.3.), "Assessing Trump's proposed 25% tariff on imports from Mexico and Canada," Brookings.

34) Swanson, Ana(2024.11.23.), "Trump's Trade Agenda Could Benefit Friends and Punish Rivals," The New York Times.

2. 높아지는 수입규제 ‘파고’

- 중국 공급과잉의 영향으로 전 세계 수입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우리 기업이 함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24년 상반기 전 세계 반덤핑 조사 169건, 상계관세 조사 35건 신규 개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년 수준(반덤핑 355건, 상계관세 56건)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³⁵⁾

표7. 2024년 전 세계 對韓 수입규제 신규조사 개시 현황

	규제국	품목명	규제유형	대상 국가	조사개시일
1	필리핀	시멘트	세이프가드	-	- 2024.10.28
2	인도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고무	반덤핑	한국, 중국, EU, 러시아	- 2024.09.26
3	말레이시아	주석도금강판	반덤핑	한국, 중국, 인도, 일본	- 2024.08.14
4	마다가스카르	식물성 기름	세이프가드	-	- 2024.07.18
5	EU	에폭시 수지	반덤핑	한국, 중국, 대만, 태국	- 2024.07.01
6	인도	액체 에폭시 레진	반덤핑	한국, 중국, 대만, 태국 등	- 2024.06.29
7	튀르키예	주석도금강판	반덤핑	한국, 중국, 독일, 일본 등	- 2024.06.28
8	베트남	아연도금 강판	반덤핑	한국, 중국	- 2024.06.14
9	튀르키예	폴리스티렌	반덤핑	한국, 중국, 대만, 인도 등	- 2024.05.14
10	미국	에폭시 수지	상계관세	한국, 중국, 인도, 대만	- 2024.04.24
11	미국	에폭시 수지	반덤핑	한국, 중국, 인도, 대만 등	- 2024.04.24
12	튀르키예	아세트산에틸	세이프가드	-	- 2024.04.06
13	튀르키예	열연후판	반덤핑	한국	- 2024.04.02
14	인도	PVC 서스펜션 수지	반덤핑	한국, 중국, 인니, 일본 등	- 2024.03.26
15	미국	미세 데니어 폴리에스터 단섬유	세이프가드	-	- 2024.02.28
16	남아공	철강 평판압연제품	세이프가드	-	- 2024.02.23
17	튀르키예	기타 종이 및 판지	세이프가드	-	- 2024.01.24
18	튀르키예	편물	세이프가드	-	- 2024.01.12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DB

- 중국 공급과잉으로 피해를 입은 현지 업계가 중국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도 함께 제소할 수 있음
- '24년 한국에 대해 신규 개시된 수입규제 조사 총 18건 중 17건이 중국도 대상으로 함(세이프가드 포함)
- 제3국 시장 내 중국 업체들의 공격적 가격 인하에 대응해 경쟁을 위해 내수 대비 수출가격을 낮출 경우 반덤핑 관세 타킷이 될 수 있음³⁶⁾

35) WTO

36) Iguchi, Kosuke(2024.11.20.), "Japan sees rise in steel anti-dumping probes amid China overcapacity," Nikkei Asia.

- (미국) 중국의 물량공세로 글로벌 공급과잉 상태인 원재료 및 연관 제품에 대해 특별시장상황(PMS) 조항 적용을 확대할 가능성에도 대비

참고1. 특별시장상황(PMS) 주요 내용

- (정의) 수출국 내 과잉생산, 정부보조금 등 '특별한 시장 상황'으로 인해 조사 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고율의 반덤핑관세 부과에 근거가 됨
- (과거 사례) 트럼프 1기 행정부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 연례재심(17.4월)을 시작으로 PMS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 (최근 동향) 미국 법원이 상무부의 PMS 적용 방식 및 정상가격 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파기환송 건이 증가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 PMS 적용 건수 급감

- 상무부는 규정 개정(24.3월)을 통해 법원에서 확인된 PMS 조사기법상의 흠결을 보완하고, 관세법 내 미비했던 PMS의 정의 및 적용 지침을 구체화
 - PMS를 '판매 기반 PMS'와 '원가 기반 PMS'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
- 특히 원가 기반 PMS의 예시 중 하나로 조사 대상 제품 생산에 중요한 원자재 국제시장 내 공급과잉 (oversupply)으로 원자재 가격 또는 원가에 왜곡이 발생하는 경우를 명시
 - 공급과잉이라는 동일 또는 유사 상황이 다른 국가에 존재하더라도 조사대상국에 PMS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음
-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반덤핑 신규 조사나 연례재심에서 PMS를 활발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상당하며, 철강 외에 중국발 공급과잉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다른 품목까지 확대될 수 있음
 - 존 물레나 美 하원 중국특위 위원장은 중국 과잉생산으로 제3국 시장에도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무부 반덤핑 조사에서 내수가격, 원가 산정 시 이의 반영을 촉구(24.10.23.)

□ (美·EU) 공급망 상에 중국과 접점을 갖고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초국경 보조금’을 이유로 한 상계관세 부과에 나설 수 있음

○ 美 상무부는 수입규제 규정 개정을 통해 중국 정부의 초국경보조금에 대한 규율을 강화

- (개정 내용) 기존 美 반덤핑·상계관세 규정은 제3국 정부가 수출국 소재 기업에 제공한 초국경 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제한했으나, 규정 개정('24.3월)을 통해 해당 조항(CFR 351.527)을 폐기³⁷⁾

* 그동안 상계관세는 수입국이 수출국 정부가 수출국 영토내에서 제공한 보조금을 규율대상으로 삼았으나, 일대일로 등을 통해 제3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 또는 중국과 연계된 불특정 국가 기업에게도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지자 제3국의 보조금 혜택이 수출국 내 제조기업에 제공될 경우 이를 ‘초국경 보조금’이라 보고 규제대상으로 삼기 시작

○ 최근 동남아 4개국産 태양광 셀에 대한 상계관세 예비판정에서 초국경 보조금 관련 첫 판정이 내려짐

- 상무부는 동 조사 건에서 중국 은행의 정책 대출 및 중국 기업의 저가 폴리실리콘 공급을 상계 가능한 초국경 보조금으로 예비판정('24.10.1.)³⁸⁾

- (일대일로 정책 대출) 일대일로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한 조사 대상 기업이 중국 은행에서 받은 정책 대출 혜택은 중국 정부의 ‘자금 직접 이전’ 형태의 재정적 기여에 해당한다고 판정³⁹⁾

- (저가 중국산 원료 제공) 중국 국유·국영 및 정부의 통제를 받는 기업이 조사 대상 기업에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 판매한 폴리실리콘은 적정 가격 미만(Less Than Adequate Remuneration, LTAR) 제공으로 보고 초국경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단⁴⁰⁾

○ (조사 확대 가능성) 최근 한국산 예폭시 수지 상계관세 조사에서도 초국경 보조금 조사가 추가로 개시('24.11.12.)되었으며, 다른 국가, 다른 업종에서도 신규 조사 청원 또는 연례재심 단계에서 초국경 보조금 조사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

○ 중국 내 자회사, 합작사와 거래 이력이 있거나, 동남아, 중남미 등 제3국 내 중국 정부가 조성·참여하는 산업단지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對美 수출 최종재에서 중국산 원재료·부품 비중이 높을 경우 초국경 보조금 조사가 개시될 가능성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

37) U.S. Commerce ITA(2024.3.25.), “Regulations Improving and Strengthening the Enforcement of Trade Remedies Through the Administration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Laws”, 89 FR 20766.

38) Simon Lester(2024.10.6.), “Preliminary U.S. CVDs on Solar Products from Southeast Asian Countries Target Chinese Production; First Ruling on Transnational Subsidies,” China Trade Monitor.

39) Ib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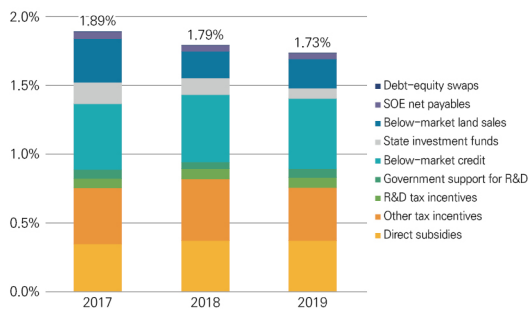
40) Ibid.

○ 보호무역을 촉발하는 중국발 공급과잉(Oversupply)

1. 공급과잉 현황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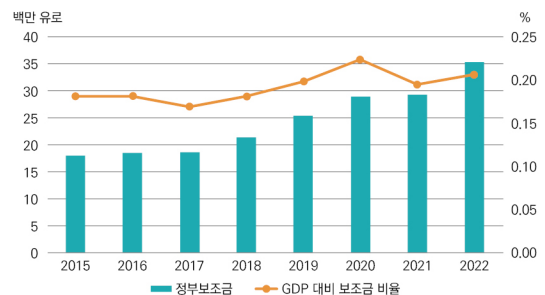
- 중국은 수년간 대규모 산업보조금을 바탕으로 생산설비를 증설해 왔으며, 누적된 과잉설비에 따른 과잉 공급이 전통 제조업을 넘어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
- 중국 정부가 주요 산업에 자본 투자를 하기 위해 운용하는 공공 기금 규모는 1.9조 위안(360조 원)에서 6.5조 위안(1,232조 원)으로 추정⁴¹⁾
- 미국이나 EU 등 주요국과 달리 중국의 산업보조금 지급 규모가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집계는 어려우나, '05~'19년 까지 평균적으로 지급된 생산보조금은 중국 기업 매출의 4.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⁴²⁾
- 중국의 산업 정책 지출은 '19년 기준 GDP의 1.73%에 달하며 주로 직접보조금, 연구개발 및 기타 세제 인센티브, 신용 제공 등으로 구성⁴³⁾
- 중국에 상장된 5,260개 기업의 연차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중 99% 이상이 '22년도에 직접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급 규모는 증가 추세⁴⁴⁾

그림3. 中 산업 정책 지출 내역 및 비중



자료: CSIS

그림4. 中 상장기업 대상 직접보조금 지급 추이



자료: KIEL

41) WTO(2024.11.19.), "Trade Policy Review: China", WTO.






42) Francois, Chimits(2023.7.), "What Do We Know About Chinese Industrial Subsidies?", CEPII.

43) Gerard, DiPippo, et al.(2022.5.), "Red Ink: Estimating Chinese Industrial Policy Spending in Comparative Perspective", CSIS.

44) Bickenbach, Frank, et al.(2024.4), "Foul Play? On the Scale and Scope of Industrial Subsidies in China, Policy Brief", KIEL.

- 누적된 과잉 설비에서 비롯된 공급은 국내 수요와 불균형을 일으켜 산업 전반에 초과 공급 발생
- 중국의 철강 생산 설비 규모는 '14년 1,223mmt로 고점을 찍은 후 정부의 철강 설비 감축 계획에 따라 소폭 감소했으나, 가동률이 증가해 오히려 철강 생산량은 증가⁴⁵⁾
 - * 설비 가동률: '14년 67% → '20년 93%, 中 철강 생산량: '14년 808mmt → '20년 1,065mmt
 - '23년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생산능력은 1,500GWh, 중국 내 배터리 수요 예상치는 636GWh로 864GWh의 초과공급이 발생했으며, '24년(2,075GWh/802GWh)과 '25년(2,872GWh/933GWh)에도 불균형이 이어질 전망⁴⁶⁾
 - '24.11월 기준 중국의 연간 전기차 생산량이 세계 최초로 1,000만 대를 돌파하였고, 내수 판매량('24.1~10월)은 975만 대를 기록⁴⁷⁾
 - * 中 전기차 생산량: '20년 137만 대 → '22년 706만 대 → '23년 959만 대 (자료: CAAM)
- 2000년대 초반 중국산 저가 공산품이 시장에 쏟아지며 각국의 제조업이 타격을 받았다면('1차 차이나쇼크'), 현재는 철강과 석유화학 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전통적인 제조업과 신산업 전반에 중국의 과잉 공급으로 인한 충격이 확대('2차 차이나쇼크')

표8. 주요 산업별 중국의 공급과잉 현황

구분	내용
 철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중국의 조강 생산량은 전세계 생산량의 54% 차지 * 중국: 1,019mmt, 세계: 1,893mmt - '23년 중국의 철강(HS72) 순수출액 \$341
 석유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평균 글로벌 에틸렌 증설 물량의 과반을 중국이 차지 - 22년 중국의 석유화학 생산능력 성장률은 주요지역 성장률을 상회 * 중국 8.9%, 중국 외 아시아 2.1%, 북미 3%
 전기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1~9월 누적 인도량 기준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상위 10개 기업 중 5개가 중국 기업이며, 이들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약 42% * BYD(1위, 22.3%), Geely(3위, 7.7%), SAIC(5위, 5.7%) 등
 배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기공급망을 수직계열화하며 단기간에 시장 점유율 확대 - '23년 중국의 배터리 생산량(1.07TWh)은 전세계 수요(0.95TWh) 상회 - 중국 배터리 생산능력은 꾸준히 증가하여 과잉생산 지속 전망
 태양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중국 비중은 모든 부품에서 80% 이상 - '23년 중국 모듈 생산능력(1,012GW)은 글로벌 설치용량(653GW) 상회 - '23년 모듈 가격은 50% 하락, 태양광 산업 수익성 감소 우려

자료: WSA, IEA 외

45) 이정아 외 2(2024.8.22.), "중국 공급과잉에 대한 주요국 대응 및 시사점", 통상리포트 Vol.8, 한국무역협회.

46) ibid.

47) Ren, Daniel and Yujie Xue(2024.11.14.), "China's 10 millionth EV rolls out, as makers set sights on exports to digest overcapacity", SCM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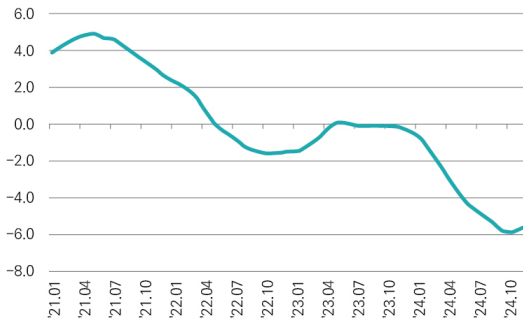
□ 중국의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인한 과잉생산 물량을 저가 수출을 통한 밀어내기 방식으로 해소

○ 중국 GDP의 약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가계 부문의 소비 여력이 위축

- 중국 신규 주택가격은 '22.4월부터 하락세가 이어지며 '24.10월에는 9년만의 최대 낙폭인 -5.9% 기록

○ 소비자의 경제 전망과 소비 심리를 평가하는 지표인 소비자신뢰지수(CCI)도 '22.4월부터 100 미만 상태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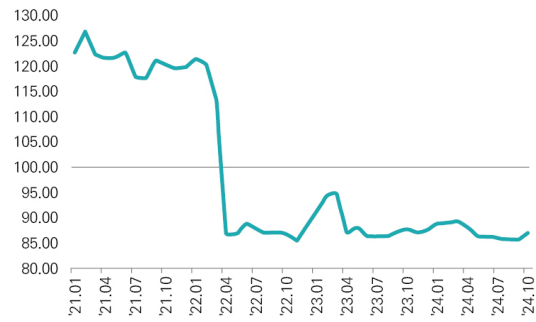
그림5. 중국 부동산 가격지수 추이 (YoY%)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주: 중국 70개 도시 신규 주택 가격의 평균

그림6. 중국 소비자신뢰지수 추이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주: 100 이상은 긍정적, 100 미만은 부정적 평가 의미

○ 중국의 수출물량 증가폭과 수출단가 감소폭은 주요국 대비 큰 수준이며, 이를 통해 중국은 단가 인하로 수출 밀어내기를 확대하는 것으로 추정⁴⁸⁾

- '24년 1~9월까지 중국의 수출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하여 전세계(2.4%)·선진국(0.6%)·신흥국(5.2%) 평균을 각각 상회

- 2023년 8월 중국의 달러 기준 수출단가는 전년 동월 대비 13.9% 하락하며 '00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24년 1월~9월까지 수출 단가 하락폭은 신흥국 평균(-2.8%)과 전세계 평균(-1.1%)을 하회하는 -7.2%를 기록

48) 도원빈(2024.7.23.), "중국의 저가수출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트레이드 브리프 Vol.8, 한국무역협회.

표9. 중국 및 주요 지역의 수출 물량·단가 증가율

(단위: 전년동기비 %)

구분	수출물량			수출단가		
	'23.상	'23.하	'24.1~9월	'23.상	'23.하	'24.1~9월
세계	-0.5	-0.7	2.4	-4.0	-3.9	-1.1
선진국	-1.3	-2.4	0.6	-1.3	-0.3	-0.1
유로존	-2.0	-5.0	-2.2	3.6%	4.6%	0.9
미국	4.5	1.9	3.4	-5.5%	-5.2%	-0.8
영국	1.3	-19.0	-7.1	-1.7%	4.6%	2.7
일본	-2.0	-0.8	0.2	-4.1%	-1.0%	-2.4
일본 외 아시아 선진국	-8.3	1.0	8.0	-6.1%	-2.9%	0.8
기타 선진국	1.4	-0.5	0.2	-3.8%	-4.2%	-1.4
신흥국	0.9	2.3	5.2	-8.3	-9.6	-2.8
중국	0.7	5.1	10.3	-3.7	-11.4	-7.2
중국 외 아시아 신흥국	-4.4	0.1	6.2	-4.3	-4.2	-1.1
동유럽·CIS	8.9	17.9	3.7	-32.7	-32.8	-2.8
라틴아메리카	0.1	-2.4	2.0	-0.9	1.5	0.7
아프리카·중동	6.1	-4.1	-5.9	-17.6	-9.5	4.9

자료: CPB(검색일: 2024.11.28.), 도원빈(2024)

주: 선진국은 유로존, 미국, 영국, 일본 등을, 신흥국은 동유럽,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등을 포함

□ 수출 확대 기조에 따라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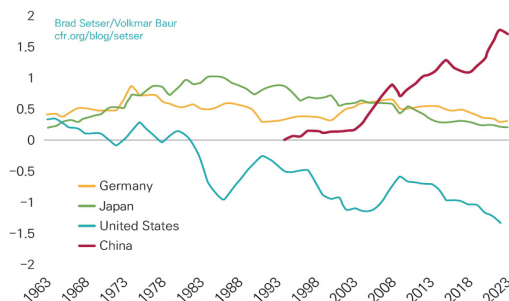
○ 중국의 제조업 무역수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GDP의 약 2%에 근접했으며, 이는 일본과 독일 같은 수출 강국이 기록했던 최대 흑자 규모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⁴⁹⁾

○ 중국의 무역수지는 '18년 3,714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매년 증가하여 '22년에는 사상 최대 흑자(\$8,890억) 달성

- 세계 경제 둔화 및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23년에는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8,58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최근 5년 평균(\$6,803억, 2019~23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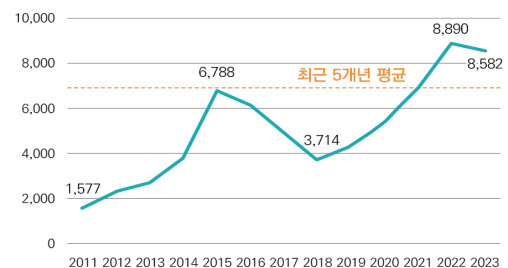
○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 확대가 지속됨에 따라 무역적자를 보는 상대국과의 무역 갈등 심화 우려

그림7. 세계 GDP 대비 주요국 제조업 무역수지 (1963~2023년)



자료: UN Comtrade, CFR

그림8. 최근 중국의 무역수지 규모 (2011~23년)



자료: 한국무역협회

49) Setser, Brad W, et al.(2024.3.10.), "China's Record Manufacturing Surplus", CFR.

□ 최근 중국이 제조업 인센티브를 포함한 경기부양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어 공급과잉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

- 중국은 '24.9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내수 진작과 제조업 경기 회복을 위한 대규모 통화 및 재정 부양책을 발표
- 부양책은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완화, 국채 및 지방채 발행을 통한 정부 투자 활성화, 연구개발비용 및 첨단제조업 증치세 추가 공제 등 기업 지원 확대방안 등을 포함
-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 강화정책과 공공수요 확대를 통한 내수 진작 정책으로 공급과잉이 만성화 될 우려
- '24.3월 양회에서 발표된 중국의 정책 기조는 '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구(稳中求进, 穩中求進)'하는 것으로, 안정을 최우선시한 전년도에 비해 성장에 더 무게를 실은 것으로 평가⁵⁰⁾
- 전국 31개 성시에서 모두 '과학기술 혁신' 혹은 '현대화 산업 체계구축'을 3대 과제로 포함함에 따라 생산성 제고 및 기술혁신에 따른 공급과잉 우려

표 10. 2024년 9월 이후 중국 경기부양책 주요 내용

발표일자	발표 기관	주요 내용
2024년 9월 24일	중국인민은행,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중국증감회	- 지급준비율 및 정책금리 인하, 주식 시장 안정자금 지원 - 2주택자 최소 계약금 비율 하향,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10월 8일	중국발전개혁위원회	- 2025년 예산을 2,000억 위안 조기 할당하여 건설 프로젝트와 투자 계획 실행을 촉진
10월 12일	중국재정부	- 부채 한도를 대폭 늘려 지방정부 부채 감축 -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6대 국영 상업은행에 자본 투입
10월 17일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재정부, 자연자원부, 인민은행, 금융감독관리총국	- 유휴토지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보장성 주택으로 활용 - 각종 주택 구매 제한조치를 취소하고 주택 공적금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11월 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 지방정부 부채 한도 확대를 통한 음성부채 양성화 계획 -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위한 세수 정책

자료: 조고운(2024)

50) 전보희·박소영(2024.3.5.), "2024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산업 정책방향과 시사점", 트레이트 포커스 Vol.9, 한국무역협회.

2. 주요국 대응과 중국의 반발

- 공급과잉을 포함한 중국 관련 리스크 및 중국산 수입확대에 대응해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 조치를 강화
- [미국] 중국과의 분쟁이 본격화된 2018년 이래로 중국을 견제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부과와 수출 통제 등 다양한 조치를 도입

표 11. 미국의 주요 대중국 제재 내용

구분	일자	내용
관세 부과	'18.2.	- 태양광패널에 40%, 세탁기에 20% 관세 부과
	'18.3.	-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관세 부과
	'18.7.	- 中 배터리·기계부품 등 818종(List1)에 25% 관세 부과
	'18.8.	- 플라스틱 등 333종(List2)에 25% 관세 부과
	'18.9.	- 6,000종 이상의 중국산 수입품(List3)에 10% 관세 부과
	'19.6.	- List3 품목 관세율 25%로 인상
	'19.9.	- 1,12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List4A)에 15% 관세 부과
	'24.4.	- 中 알루미늄·철강 관세율 최대 25%로 인상 발표
	'24.5.	- 中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에 최대 100% 관세 인상 발표
규제 제·개정	'18.8.	-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FIRRMA) 및 수출통제개혁법(ECRA) 서명
	'19.11.	- 국가 보안 유지를 위한 통신산업 규제 신규 발표
	'20.4.	- 美 상무부, 중국·러시아 등 기술 수출 제재 강화
	'20.5.	-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개정
	'21.6.	- 中 신장 지역으로부터 태양광 패널 관련 상품 수입 금지
	'22.6.	-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 발표
	'22.8.	-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ct)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서명
	'22.10.	- 美 기업 대상 대중국 첨단반도체 수출통제 시행
	'23.10.	- 美 상무부, 대중국 첨단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자료: 김나율(2024) 일부 수정

- 미국의 대중국 제재 조치는 2021년 취임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어졌으며,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향후 보호주의는 더욱 강해질 전망
- 트럼프 당선인은 유세기간 중 중국에 대한 최혜국(MFN) 대우를 박탈하고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밝힘
- 중국의 제3국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멕시코산 자동차에 최대 2,000% 관세를 부과하고, 2026년 USMCA* 검토에서 원산지 규정 강화를 추진할 방침

*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exico-Canada Agreement)

- **[EU]** 주로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WTO 규범에 합치하는 무역구제 조치를 시행했으며 최근 역외 보조금규정(FSR)에 근거한 보조금 조사를 확대
 - '22년 약 4,000억 유로에 달하는 대중국 무역 적자를 기록한 EU는 저가 전기차 수입이 급증하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개시하고 잠정상계관세를 부과('24.7.)⁵¹⁾
 - * 제조사별 잠정상계관세율은 BYD 17.4%, Geely 19.9%, SAIC 37.6%, 조사 협조 업체 20.8%, 조사 비협조 업체 37.6% 등
 - EU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232조 철강 관세 인상 조치('18.3월)에 대응해 시행중인 글로벌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26.6월 말까지 연장⁵²⁾
 - EU는 전기차에 이어 중국산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등 10여개 부문에 대한 덤핑 및 보조금 조사를 개시해 대중국 견제를 강화⁵³⁾

표 12. EU 역외보조금 관련 심층조사 사례

대상	공공조달 내용	경과
중저승팡	불가리아 전동차 도입 프로젝트 ('23.9월 공고/6.1억 유로)	'24.2.16. 심층조사 개시 → 입찰 참여 철회로 조사 종료
에네보 컨소시엄 (룽지뤄닝[中]+에네보[루마니아])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 ('23.9월 공고/3.75억 유로)	'24.4.3. 심층조사 개시 → 입찰 참여 철회로 조사 종료
상하이전기 컨소시엄 (상하이전기 꺄자회사+홍콩자회사)		

자료: 강명구(2024)

- **[신흥국]** 전통적 무역구제조치와 비관세장벽을 활용하여 중국과의 경쟁에 대응
 - 신흥국은 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높고 중국의 보복조치에 더 취약하여 공식적인 무역구제조치보다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국내 생산을 장려할 수 있는 수입쿼터와 보조금 제도 등 비공식적 무역장벽을 활용하는 경향⁵⁴⁾






51) 이정아 외 2인(2024.8.22.), op.cit.

52) European Commission(2024.6.25.), "EU prolongs steel safeguard measure until June 2026", European Commission

53) 이정아 외 2인(2024.8.22.), op.cit.

54) Boullenois, Camille and Charles Austin Jordan(2024.6.18.), "How China's Overcapacity Holds Back Emerging Economies", Rhodium Group.

표 13. 중국 공급과잉에 대한 신흥국의 대응

국가	내용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3. 중국산 철강 못, 철강 공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 - '24.4. 중국 포함 FTA 비체결국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인상
 브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4. 11개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쿼터 조치 계획 발표 * 쿼터 초과시 초과 물량에 대해 25%의 수입관세 적용 - '24.5. 중국산 냉간압연강 2종에 대한 반덤핑 조치 연장 - '24.1. 현지 생산 조건에 따른 보조금 제도 시행
 튀르키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3. 중국산 전기차에 40% 추가관세 부과 - '24.7. 중국산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40% 추가관세 부과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9.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5년간 연장 - '24.3. 중국산 알루미늄 합금 로드 휠에 대한 반덤핑 관세 인상 - '20.3. 중국산 수입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현지 생산을 기반으로 한 보조금 프로그램 (Production Linked Incentives, PLI) 시작
 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8. 중국산 합금 열연코일에 대해 30.91% 반덤핑 관세 부과 - '24.7. 중국산 저가 수입품을 겨냥해 모든 수입품에 부가가치세 7% 징수

자료: 언론 종합

□ 중국은 자국에 대한 무역제한조치 도입국을 비난하고 보복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멕시코·동남아 등에 투자 및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우회 진출로 확보 및 대체 수출시장 확보에 나섬

-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해 비판하고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24.5.)⁵⁵⁾
-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를 발표하자 중국은 EU산 유제품을 상대로 불법 보조금 조사에 착수('24.8.)
- 중국은 EU가 전기차 보조금 조사를 시작한지 3개월만에 유럽 주류 생산업체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발표한 적이 있으며('24.1.), 추가로 항공 및 농업부분에 대한 보복조치 가능성을 시사('24.5.)
- '24.3월까지 최근 1년간 멕시코에서 최소 41개의 중국 제조 및 물류 프로젝트가 발표되었고, 베트남에서는 최소 39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는 '03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⁵⁶⁾
- 이밖에 태국, 말레이시아, 헝가리, 이집트 등지에 대한 중국의 투자도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미중 무역갈등이 본격화된 '18년 이후 베트남과 멕시코의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증가했으며, 이들 국가의 대미 수입시장 점유율도 급등해 우회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⁵⁷⁾

55) Hoskins, Peter(2024.5.20.), "China hits back at US and EU as trade rows deepen", BBC.

56) Telling, Oliver, et.al.(2024.6.3.), "Chinese businesses target Vietnam and Mexico as trade tensions with US rise", Financial Times.

57) 김나을(2024.5.6.), "중국의 대미국 우회수출 추이 분석: ADB MRIO를 중심으로", 트레이드 포커스 Vol.19, 한국무역협회.

R 자원(Resources)의 新무기화

1. 에너지 패권경쟁 : 미국은 화석연료, 중국은 신재생 에너지

- 트럼프 당선인이 적극적인 화석연료 개발을 선언한 가운데, 미국의 화석연료 생산 확대시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칠 전망
- 청정에너지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경기 침체로 석유 수요가 정체된 상황에서 미국과 비OPEC+국가의 석유생산 증가로 글로벌 석유 시장은 2025년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⁵⁸⁾
 - 수요 위축과 공급과잉으로 국제유가는 '26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세('25년 73달러, '26년 72달러)를 보일 것으로 예측⁵⁹⁾
 - OPEC+의 감산이 유지되더라도 '25년 전 세계적으로 하루 120만 배럴의 공급과잉이 있을 것으로 예상⁶⁰⁾
- 미국의 수압파쇄법(Fracking) 확대에 따른 저비용 셰일가스·원유공급이 세계시장의 공급과잉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전망⁶¹⁾
 - 트럼프 당선인은 'Drill, baby, drill' 기조 아래 화석연료 산업을 육성하여 에너지자립을 강화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규제를 완화해 석유·가스의 생산 및 해당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에너지 가격을 내리겠다는 입장
 - '24년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일평균 1,320만 배럴로 '23년 1,290만 배럴(연간 최고 기록)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25년에는 1,370만 배럴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⁶²⁾
- 미국의 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한 기후 대응 정책 철회와 파리협정 재탈퇴는 국제 기후 목표 달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
-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협정 재탈퇴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일각에서는 UN 기후변화협약 탈퇴도 고려 대상이라는 예상도 제기⁶³⁾
 -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25.2월 새로운 감축 계획(NDC)⁶⁴⁾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의 기후 변화 대응과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58) 박정환(2024.11.5.), "세계 석유시장, 2025년 공급과잉 사태 직면", 글로벌이코노믹.

59) Agnolucci, Paolo and Makarenko, Nikita(2024.11.5.), "Growing oil supplies amid moderating demand and geopolitical uncertainty: What lies ahead for oil?", World Bank Blogs; IEA(2024), Oil Market Report–November 2024, IEA.

60) IEA(2024), op.cit.

61) 박정환(2024.11.5.), op.cit.

62) EIA(2024.11.26.), "U.S. Crude oil production established a new record in August 2024", EIA.

63) Schonhardt, Sara(2024.11.10.), "Why Trump's 2nd withdrawal from the Paris Agreement will be different", Politico; Dlouhy, Jennifer(2024.11.1.), "If Trump Wins, Climate Diplomats Are Ready to Bypass US Role", Bloomberg.

64) UNFCCC(2024.6.10.), "Paris Agreement Implementation and Compliance Committee Gears up to help Countries meet Key Deadlines".



-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철회될 경우, '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05년 대비 28% 감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파리협정 하 NDC 목표('30년까지 50~52% 감축)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⁶⁵⁾
- 트럼프 재집권으로 미국에서는 '30년까지 40억 톤의 온실가스가 추가로 배출될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일본과 EU의 연간 배출량을 합한 수준에 해당하며, 지난 5년간 전 세계적으로 풍력, 태양광 및 기타 청정기술 도입으로 절감한 배출량을 완전히 상쇄하고도 남는 규모⁶⁶⁾
-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 정책을 철회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장애물은 비교적 적을 것으로 전망
- 셰브론 독트린(Chevron Doctrine)⁶⁷⁾ 폐지('24.6.28.)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한 사법부의 해석 권한이 강화된 가운데, 보수성향 판사들은 향후 트럼프 정책에 보다 유리한 판결을 할 가능성⁶⁸⁾
- 트럼프 1기에서 234명의 연방법원 판사(대법관 3명 포함)가 임명되었으며, 2기에서도 대법관과 100명 이상의 하급법원 판사가 추가로 임명될 전망⁶⁹⁾
- IRA 및 IJA 등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법률은 개정·폐지 시 의회의 표결이 필요하고, 2024년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여 트럼프 정부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
-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중심축이 될 전망
- IEA는 '24-25년 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증가해 전 세계 전력 공급 비중이 35%에 달하고, '25년에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석탄 발전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⁷⁰⁾
- 태양광만으로 '25년 전 세계 전력 수요 증가분의 약 50%를 충족하고, 태양광과 풍력은 전력 수요 증가분의 75%를 충족할 것으로 예측
-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5-26년 연평균 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석탄화력발전량은 연평균 약1%씩 구조적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⁷¹⁾
- 미국의 기후·에너지 정책이 화석연료 중심으로 회귀하고 전기차 지원 정책이 둔화되면서, 중국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⁷²⁾
-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OECD 국가의 평균 3~9배에 달하는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며 경쟁력을 확보⁷³⁾

65) Evans, Simon, et al.,(2024), "Analysis: Trump election win could add 4bn tonnes to US emissions by 2030", CarbonBrief.

66) Ibid.

67) 미국 법원은 지난 40년간 셰브론 독트린에 따라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내용이 모호할 경우 행정부의 해석을 존중하며, 제한적인 사법심사권만을 행사해왔음.

68) Gramlich, John(2021.1.13.), "How Trump compares with other recent presidents in appointing federal judges", Pew Research Center.

69) Raymond, Nate(2024.11.8.), "Trump readies to name 'fearless' conservative judges in second term", Reuters.

70) IEA(2024), "Electricity Mid Year Update-Executive summary".

71) 김해지(2024), "IEA의 세계 전력시장 분석과 전망(2023-2026년)", 포커스 24-05호, 에너지경제연구원.

72) Schonhardt, Sara(2024.11.10.), "Why Trump's 2nd withdrawal from the Paris Agreement will be different", Politico.

- 중국은 태양광 패널 글로벌 가치사슬 전 부문에서 80% 이상의 점유율(폴리실리콘 93%, 웨이퍼 95%, 셀 88%, 모듈 83%)을 차지하고, 글로벌 풍력터빈 시장에서도 66%의 점유율을 차지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으로 자리매김⁷⁴⁾

○ EU는 에너지 안보와 경제·산업 경쟁력을 우선시하는 친환경 정책을 추진할 전망⁷⁵⁾

- '24년 EU 선거(극우 정당 약진)와 미국 대통령 선거(트럼프 당선) 등으로 EU의 정책 방향성에 변화가 불가피하며, 기후·환경 정책의 기본 방향성은 유지하되 추가적인 강화·확대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

- EU는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을 도입하여 탈탄소화와 산업화를 병행하고 에너지 가격을 인하할 계획⁷⁶⁾

- 재생에너지·저탄소 기술, 탄소 포집 저장·수송 인프라, 에너지 시스템의 디지털화, 수소 네트워크 구축 등 에너지 집약적 부문과 청정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원·확대하고, 저렴한 에너지 공급과 원자재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

□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 확대, EU의 에너지 공급 다변화 노력,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 등으로 EU의 대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가 줄어든 것으로 보임

○ EU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지속 줄이는 한편 대러시아 에너지 제재를 더욱 강화할 전망

○ 우크라이나 침공 전 러시아는 유럽 천연가스 수입의 50%를 차지하며 최대 공급원이었으나, EU는 베르사유 선언('22.3월), REPowerEU 패키지('22.5월), 가스 저장 규정('22.6월) 등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도 감축 정책을 적극 추진

- 러시아산 해상 원유·정제 석유 제품의 수입 금지, EU 항구에서의 러시아 LNG 재수출 금지 등의 제재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는 한편, 에너지 전환과 공급망 구축을 통해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 청정산업딜을 통해 러시아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화석연료 감축, 연료 공동 조달 강화, 에너지 연합(Energy Union)을 구축⁷⁷⁾

○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 운송협정 종료('24.12.31.)로 양국의 손실(러시아 연간 45억\$, 우크라이나 연간 10억 \$)이 예상되며, 러시아산 가스에 의존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 일부 회원국의 에너지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⁷⁸⁾

73) Bickenbach, Frank, et al.,(2024.4). Flout Play? On the Scale and Scope of Industrial Subsidies in China, Policy Brief, KIEL.

74) Woodmackenzie(2024.5.1.), "China leads global wind turbine manufacturers' market share in 2023", Woodmackenzie.

75) 손서원, "EU는 그린딜에서 청정 산업 딜로", 삼성증권; 장영욱 외(2024), "2024~29 EU 집행위원회 정책 의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세계경제 포커스, Vol.7 No.3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76)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24.7.18. 유럽의회 인준투표 당일 차기 집행위의 우선순위 정책을 담은 정책 의제를 발표. Political Guidelines, Ursula von der Leyen-Candidate for the European Commission President.

77) European Commission(2024.7.18.), "Statement at the European Parliament Plenary by President Ursula von der Leyen, candidate for a second mandate 2024-2029".

78) Reuters(2024.11.16.), "Explainer: What happens when Russian gas to Europe via Ukraine stops?".

2. 미국의 관세에 대응하는 중국의 핵심광물 통제

- 중국은 핵심광물 수출통제를 지정학적 도구로 활용하며,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은 ‘사회주의적 법치’를 내걸고 수출관리제도를 체계화 중이며 이에 대해 미국과 서구동맹국은 핵심광물을 경제 강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입장⁷⁹⁾
 - 수출관리는 법률(대외무역법('94), 해관법('87), 수출통제법('20), 관세법('24)), 조례(기술수출입관리조례,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 군수품 수출관리조례), 행정법규(수출금지제한기술 관리방법, 수출상품할당관리 방법), 목록(수출금지·수출허가증 관리 화물목록, 이중용도 물품기술 수출입허가증관리목록), 공고 등을 통해 구체화⁸⁰⁾
- 중국은 자국에 첨단기술 제재를 시행하는 국가들에 대한 보복조치로 핵심광물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은 전 세계 갈륨 생산량 98%, 게르마늄 정제 생산량 68%, 흑연 생산량 60%, 안티몬 공급량 56% 점유⁸¹⁾
 - 중국은 수출통제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닌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로, 법에 따라 시행된 것임을 강조해왔으나⁸²⁾ 중국의 주요 수출국이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임을 고려할 때 미국의 대중국 첨단기술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이 중론⁸³⁾
- '24.12월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첨단기술 제재에 대응해 미국을 직접 겨냥한 민간 및 군사용 이중용도 기술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며, 미국과 동맹국에 핵심광물 공급 차단 가능성을 시사⁸⁴⁾
 - 중국은 '24.9월 안티몬 수출제한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12월 미국을 직접 겨냥한 조치를 발동하였는데, 이는 미국에 무역전쟁 격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 하려는 의도로 해석⁸⁵⁾
 - * '24.9월 조치로 중국산 안티몬의 출하량이 97% 감소하고 가격이 200% 급등하는 등 미국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줌
 - 중국은 전 세계 안티몬 생산량의 48%, 미국 안티몬 수입량의 63%를 차지하는 주요 공급국이고, 미국은 안티몬 생산이 전무 하고 비축량도 제한적임
 - 중국은 방위 기술에 필수적인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초경질 물질의 대미 수출을 통제하여, 미국의 방위 기술 생산 역량을 약화시키고 자국의 전략적 우위를 도모

79) Glaser, Bonnie(2021.12.7.), "How China Uses Economic Coercion to Silence Critics and Achieve its Political Aims Globally", GMF.

80) Kotra(2024.11.) 체계, 절차, 대응 방식 중심으로 이해하는 중국 수출관리제도.

81) 김경숙, 홍건식(2023.12.),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통제와 시사점", INSS 전략보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82) 중국정부(2023.7.5.), "2023年7月5日外交部发言人汪文斌主持例行记者会",



https://www.mfa.gov.cn/web//wjdt_674879/fyrbt_674889/202307/t20230705_11108739.shtml.

83) 이효진(2023.7.14.), "중국의 갈륨 및 게르마늄 수출통제 배경 및 전망", 동향 세미나, 중국전문가포럼, KIEP

84) Baskaran, Gracellin and Schwartz, Meredith(2024.12.4.), "China Imposes Its Most Stringent Critical Minerals Export Restrictions Yet Amidst Escalating US-China Tech war", CSIS.

85) Baskaran, Gracellin and Schwartz, Meredith(2024.12.4.), op.cit.

그림9.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 조치에 따른 중국의 대응

미국 대중국 조치		중국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덜란드의 첨단반도체 장비(ASML의 DUV장비)의 대중국 수출통제 발표('23.6.) • 저사양 AI칩 등 대중국 수출통제 조치 추가 발표('23.10.17.) • 기존의 첨단반도체에 대한 수출통제를 범용 반도체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하려는 계획 발표('23.12.21.) • 수출통제 대상 품목에 특정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을 추가('24.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륨, 게르마늄 등 30여개 희소광물 수출통제 발표('23.7.3.) • 흑연 및 관련 제품에 대한 임시수출통제 발표('23.10.20.) • 희토류 추출·분리 가공기술 수출금지('23.12.21.) • 안티몬 및 관련 제품에 대한 수출통제 발표('24.8.15.) •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초경질재료 등 민간·군수 이중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통제 발표('24.12.3.)

□ 주요국은 자국 중심의 핵심자원 공급망 구축을 통해 국가안보와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

○ (미국) 미국은 핵심 광물의 국내 생산과 인프라 확대, 연방정부 지원 강화, 우방국 중심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공급망 회복탄력성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⁸⁶⁾

- 트럼프 당선인은 '20년 행정명령*을 통해 중요 광물의 외국 의존이 미국 안보와 경제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공급망 안정성 확보와 자립성을 위한 국내 채굴·가공 역량 강화를 강조⁸⁷⁾

* ▲적대국의 자원 및 가공에 의존하지 않는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핵심 광물 채굴 및 가공 역량의 강화·개발 등을 지시

○ (EU) 폰데어라이엔 2기 집행부는 에너지 안보와 경제·산업 경쟁력을 우선순위 과제로 삼고 있어 핵심광물 공급망의 자주권 확보를 위한 자원 안보 전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

- 핵심원자재법* 발효('24.5.23.)로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

* ▲핵심·전략원자재 지정, ▲역내 생산 역량 목표('30년까지 EU 연간 소비량 대비 최소 채굴 10%, 정제·가공 40%, 재활용 25%를 역내 조달/제3국 의존도 65% 미만으로 감축) ▲공급망 모니터링 강화, ▲순환 경제·지속가능성 등의 내용을 포함

86) 박가현 외(2022), “주요국의 핵심광물 확보전략과 시사점”, 트레이드 포커스, 2022년 32호, 한국무역협회.

87) 대통령령 행정명령13953(2020.9.30.), “Addressing the Threat to the Domestic Supply Chain From Reliance on Critical Minerals From Foreign Adversaries and Supporting the Domestic Mining and Processing Industries”.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0-10-05/pdf/2020-22064.pdf>.

□ 주요국들이 대중국 핵심광물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을 강화함에 따라, 핵심광물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노력의 결과에도 주목할 필요

○ 미국과 EU는 우방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미-일 핵심 광물 협정과 미-EU 핵심 광물 협정 등을 통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EU도 새로운 청정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을 모색하며 핵심 광물과 원자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⁸⁸⁾

- EU는 EU-아프리카 전략('17년), EU-라틴아메리카 원자재 파트너십('18년)⁸⁹⁾ 등 자원보유국과의 파트너십 등을 통해 제3국과 협력을 강화⁹⁰⁾

○ 한국의 핵심 광물에 대한 대중국 의존도가 점진적으로 축소되며 아프리카, 호주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급망이 다변화될 것으로 전망

- 한국은 핵심광물 확보전략에서 '30년까지 전기차·이차전지·반도체의 분야 공급망 안정화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중국 수입의존도를 50%대로 낮출 것을 목표⁹¹⁾

- '27년부터 미국 IRA*하 중국산 흑연에 대한 유예조항이 종료됨에 따라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을 마련할 필요

* 미국 IRA의 보조금 지급 조건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광물의 일정 비율은 반드시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가공, 또는 재활용된 광물을 사용해야 하는데, 한국의 대중국 천연 흑연 수입의존도는 94.4%('22년 기준)

88) European Commission(2024.7.18.), "Statement at the European Parliament Plenary by President Ursula von der Leyen, candidate for a second mandate 2024-2029".

89) European Parliament(2017.10.24.) "Report on the EU-Africa strategy: a boost for development" EuroGeoSurveys, "EU Latin American Partnership on Raw Materials".

90) 산업부(2023.2.27.), "첨단산업 글로벌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광물 확보전략", 산업부 보도자료.

91) Ibid.

M 제조업 부흥(Manufacturing Renaissance) 경쟁 2막

1. 제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전쟁’

- 첨단기술·기후변화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주도권 확보 수단으로 보조금을 필두로 한 산업정책이 적극 도입되며 주요국 간 ‘보조금 전쟁’ 개시
- 보조금을 통한 낮은 생산비용 및 시장 규모를 내세운 중국의 급부상에 미국이 보조금과 기술통제로 대응하며 미·중간 첨단기술 확보 경쟁 본격화
-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무역-환경간의 연계가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주요국의 청정에너지 등 자국 신산업 보호주의 정책 확대⁹²⁾
 - 친환경 산업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펼쳐지며 자국의 관련 산업에 대한 직접보조금 제공, 세금 감면, 규제 완화, 국산 부품 사용 장려 등의 지원정책이 적극 추진됨
 - EU의 ‘그린딜 정책(European Green Deal)’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은 기후변화 대응정책이자 동시에 친환경 산업 육성 및 보호를 위한 산업정책 수단
- (미국)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법률에 근거하여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 달성을 위한 대규모 보조금 지급 주도
 - 바이든 행정부는 화석연료 중심 산업구조의 친환경 전환과 첨단산업 영역에서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목적으로 임기 초부터 강력한 제조업 육성정책을 추진
 - ‘21.11월 인프라투자법, ‘22.8월 반도체과학법(2,800억\$)과 인플레이션감축법(3,690억\$)을 연달아 발효
 - 미국 내 투자기업에 대한 막대한 혜택과 더불어, 첨단 기술분야 중심으로 對중국 인바운드·아웃바운드 투자 규제를⁹³⁾ 강화하며 대중국 견제의 범위도 확대
- (중국) 보조금 지원 규모·종류 차원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중국은 전기차·배터리·AI 등 첨단 분야 중심으로 전문학적 보조금 지급
 - 중국의 산업정책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7%⁹⁴⁾에 해당하는 2,500억 달러(‘19년)로 추정되며, 정부 조달 정책과 저금리 대출, 국유 투자 펀드 등까지 고려하면 GDP의 최대 4.9%에 달함⁹⁵⁾

92) 정예지, 윤인구(2024.8.28.), "주요국의 자국산업 보호 정책 현황과 전망", 국제금융센터.

93) Hawkins, Ari(2024.10.28.), "Biden administration finalizes rule on investments in China", Politico Pro.

94) 한국(2위)의 2배

95) DiPippo, Gerard(2022.5.23.), "Estimating Chinese Industrial Policy Spending in Comparative Perspective", CSIS.

- 중장기 산업 전략 ‘제조 2025’(15.5월 발표)를 시작으로 자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하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
- 특히, 전기차·배터리·태양광을 국가 차원의 차세대 성장 동력인 ‘3대 신산업’으로 지정하고, OECD 국가 평균의 3~9배에 달하는 막대한 보조금* 지급⁹⁶⁾

*전기차 산업 보조금('09~'22 합산): 1,730억 달러⁹⁷⁾, 태양광 산업 보조금('23): 1,300억 달러⁹⁸⁾

- 그 결과 중국 ‘3대 신산업’은 전체 산업 생산의 15.7%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23년 기준)⁹⁹⁾

□ (EU) 정부 보조금에 비판적이던 기존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EU반도체법 등 역내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조치 시행

- EU는 전통적으로 보조금보다는 규제·의무 부과를 통한 장려책을 선호해왔으나, 최근 미·중의 보조금·세제 혜택을 앞세운 첨단산업 장악 현실에 대한 직시와 더불어 보조금의 직접 영향권인 태양광, 배터리 등 기업들의 ‘EU판 IRA’ 제정 요구 빈번¹⁰⁰⁾

- 이에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EU반도체법(22.8월)과 친환경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한 그린딜 산업계획('23.2월) 발표

- EU반도체법*은 반도체 기술역량 강화 및 역내 생산역량 확보를¹⁰¹⁾, 그린딜 산업계획은 친환경 분야에서도 청정 기술 투자 촉진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자금조달 원활화를 도모¹⁰²⁾

* '30년까지 144.5억 유로의 자원 조달, 공공·민간을 합쳐 총 430억 유로 지원 계획

2. 트럼프 2기 미국의 제조업 육성책은 당근(보조금)보다 채찍(관세)

- 2024년 선거에서 승리한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에서 활용한 보조금 지급을 줄이는 대신 국내외 기업이 고율의 관세 부담을 피하고자 대미 투자(온쇼어링)를 확대하도록 유인

- 보조금(당근)보다는 보편관세 등 무역장벽 강화 수단(채찍)과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역내 제조업 공급망 강화에 박차를 가할 전망¹⁰³⁾

- 트럼프 1기는 ‘관세’를 통한 무역적자 해소와 국내 산업 보호에 방점을 두고, 조세 감면, 주 정부 단위의 부지·용수 지원을 통해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자 함¹⁰⁴⁾

96) 이정아 외 2(2024.8.22.), op.cit.

97) Yoko Kubota and Clarence Leong(2024.4.28.), "Why China Keeps Making More Cars Than It Needs", The Wall Street Journal.

98) 이진원(2024.2.5.), "값싼 중국산 태양광 패널 공습에 美·유럽 업체 생존 위기", ESG경제: 에너지경제신문(2024.1.30.), "중국, 재생에너지 설비 화력발전 추월... 한국에 크게 앞서", 에너지경제.

99) 벤슨 우(2024.12.14.), "3대 新산업 밀어붙이는 중국..."중국의 일본화 우려는 과도"", 조선일보.

100) Jacobs, Justin et al(2023.1.24.), "Europe needs its own Inflation Reduction Act", Financial Times.

101) 이정아·도원빈(2023.9.6.), "미국과 EU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 통상리포트 Vol.8, 한국무역협회.

102) European Commission(2023.1.2.), "A Green Deal Industrial Plan for the Net-Zero Age", European Commission.

103) Reid, Tim and Gram Slattery(2024.9.25.), "Trump pledges to take jobs and factories from allies, China", Reuters.

104) 주원 외(2024.11.7.), "「트럼프 노믹스 2.0」과 한국 경제", 경제주평 24-18, 현대경제연구원.

-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고율관세¹⁰⁵⁾와 더불어 역내 생산 기업에만 낮은 법인세율·완화된 규제 등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
- 철강, 자동차 산업 등 전통 제조업의 경우, 트럼프 1기에서 도입되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유지되었던 철강·알루미늄 대상 '232조 조치'와 같은 수입규제 조치가 강화될 수 있음
- 트럼프 당선인은 IRA·반도체법 등 바이든 정부의 입법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수혜주·기업의 반대도 거센 상황
-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전기차 지원책 및 자동차 관련 각종 환경규제를 철폐할 것을 예고하였으며, 동시에 자동차의 역내 생산 촉진 및 구매비용 감축을 위해 ▲USMCA 원산지규정 강화, ▲멕시코 생산 중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 ▲법인세 인하, ▲보편적 관세의 활용을 주장¹⁰⁶⁾
-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 또한 최근 보도된 권고안에서 IRA 보조금 폐지 등 전기차에 대한 지원의 대폭 축소를 촉구¹⁰⁷⁾

참고2. 트럼프 당선인 정권 인수팀의 전기차 관련 권고 내용

- IRA 보조금 폐지
- '전기차 공급망'에 관세 부과: 배터리, 핵심 광물 및 충전 부품 등 전기차 관련제품에 232조 관세 부과
- 관세의 협상 도구화: 관세를 활용해 미국 자동차(전기차 포함)의 해외 시장 진출 확대
- 수출제한 확대: 전기차 배터리 기술의 적대국 수출제한 강화
- 연방 기관의 전기차 구매 요구사항* 폐지
 - *바이든 행정부는 2027년까지 모든 연방 차량 및 소형 트럭을 친환경 차량으로 구매할 것을 요구
-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와 연비 기준 완화
-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충전소 지원 예산 75억 달러 중 잔여분을 회수하여 배터리·소재 가공과 '국가 안보 공급망 및 중요 인프라'에 재배치

자료: Reuters

- 그러나 25개의 주요 배터리·전기차 생산설비 중 19개가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위치¹⁰⁸⁾하여 IRA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고, 지난 8월 IRA 전면 폐지 반대 서한을 보낸 공화당 하원의원 18명중 15명이 재선됨에 따라 IRA 수정에 대한 공화당 내 반대그룹도 형성

105) 트럼프 당선인은 보조금 대신 고율관세를 부과하면 반도체 기업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공장을 설립하러 올 것이라고 주장

106) Bade, Gavin and Sam Sutton(2024.10.10.), "Trump promises to 'revolutionize' auto industry in pitch to Michigan voters", Politico.

107) Renshaw, Jarrett and Chris Kirkham(2024.12.18.), op.cit.

108) Laing, Kieth(2024.12.12.), "Trump's Push to Eliminate EV Tax Credits Hits GOP Lawmakers' Home States", Bloomberg.

- 친트럼프 성향을 밝힌 대형 석유회사¹⁰⁹⁾ 및 미국 내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도 세액공제 유지를 요구¹¹¹⁾하는 등 기업들의 반대로 상당

참고3. 트럼프 2기 행정부 내각의 제조업·산업정책 관련 언행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



- ('22.12월) 미국 내 제조업 공급망 강화 지원을 촉구하는 '국가 개발 전략과 협력 법안 2022' 발의
- ('24.9월, 루비오 의원실 보고서) 이미 전기차 등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서는 '대담한 산업정책(bold industrial policy)'과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유도하는 탈규제 정책이 필요
- ('24, National Affairs 기고) IRA와 반도체법은 대규모 지출, 시장 비효율성 등 산업정책의 단점은 많이 가지면서도 국가안보나 국민에게 미치는 혜택은 부족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 지명자



- ('24.7월, 소셜미디어 X) ““보조금을 없애라. 그것은 테슬라에 도움이 될 뿐이다. 모든 산업에서 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
- ('24.12월, 폴리티코와의 인터뷰) “전기차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싶어”
- ('24.12월)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존 쉰 의원(사우스다코타)와의 만남에서도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재차 주장

○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 상·하원 선거 결과 공화당이 양원의 과반수를 확보했으나 의석수 차이가 크지 않아 IRA·반도체법의 폐기 가능성은 불분명

- 공화당이 근소한 우위를 차지함에 따라 일부 이탈표가 발생하면 단독으로 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가운데, 트럼프 내각 차출로 하원에 3석의 결원이 불가피하게 되어 1명만 추가 이탈해도 공화당 법안 처리 계획에 문제 발생¹¹²⁾

- 연방상원의 공화당 의석수는 53석으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 차단에 필요한 60석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예산조정 절차(budget reconciliation)를 통한 법 폐기를 시도하더라도¹¹³⁾ 상원 과반수(51명) 확보가 확실시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

109) Eaton, Collin and Benoît Morenne(2024.10.6.), “Big Oil Urges Trump Not to Gut Biden’s Climate Law”, The Wall Street Jour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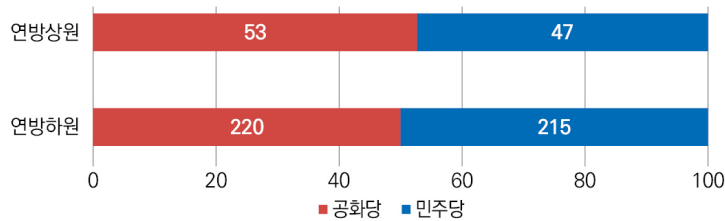
110) 단, 석유회사의 경우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조항이 아닌 ‘저탄소 에너지 기술’ 관련 세액공제에 한정하여 유지를 촉구

111) Ferris, David(2024.11.25.), “Auto industry asks Trump to keep EV tax credits”, Politico.

112) Laing, Keith et al.(2024.12.12.), “Trump’s Push to Eliminate EV Tax Credits Hits GOP Lawmakers’ Home States”, Bloomberg.

113) Picon, Andres(2024.12.5.), “Musk, on Capitol Hill, says ‘get rid of all credits’”, Politico.

그림10. 2024년 연방 상·하원 선거 결과



자료: CNN

- 트럼프 2기 초기 산업정책 집행은 의회의 동기가 필요한 법률개정정보다는 행정명령 중심이 될 가능성 농후
 - IRA의 경우 핵심광물·부품 요구사항 강화를 통한 대상 차량 범위 축소, 美 회사에 유리한 보조금 요건 신설 등 해외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의 수정될 수 있으며, 반도체법 역시 대출지원·세제 혜택 조항은 축소와 함께 해외 생산업체에 불리한 방향으로의 수정이 예상¹¹⁴⁾
- 첨단기술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미국과 핵심광물 공급망 ‘초크 포인트(choke point)’인 중국 간의 첨단산업 공급망 전쟁은 계속될 전망
 - 미국은 바이든 임기 내 마지막 대중 첨단기술 수출규제를 논의 중이며, 국가별 판매 할당, 대중국 반도체 판매에 대한 신규 세이프가드 등 도입을 시사¹¹⁵⁾
- EU는 경제안보 정책의 본격 추진과 함께 보조금 지원·규제 완화를 포함한 ‘공격적 대응’을 예고
 - 12월 2일 출범한 폰 데어 라이엔 2기 집행위는 ‘실존적 위기’에 직면한 EU의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역내 산업 보호에 나설 것임을 역설¹¹⁶⁾
 -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 내 보조금 규제 완화 및 인허가 가속화를 촉구한 바 있음(‘23.1월)¹¹⁷⁾
 - 세주르네 수석 부집행위원장¹¹⁸⁾ 역시 첨단기술을 포함한 혁신 분야에 대한 낮은 경쟁력을 지적하며 중국의 ‘메이드 인 차이나’,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에 대응하는 ‘메이드 인 유럽’·‘유럽 퍼스트’ 전략을 제안하며, 특히 철강, 자동차 제조, 항공우주, 청정기술 등 전략산업에 공격적·목표지향적 접근을 촉구¹¹⁹⁾

114) 한국무역협회(2024.11.7.),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통상리포트 Vol.12, 한국무역협회.

115) Hawkins, Ari(2024.12.10.), “Biden administration prepares final round of China tech trade restrictions”, Politico.

116) 한아름(2024.12.19.), op.cit.

117) Fleming, Sam(2023.1.18.), “EU makes green pitch to rival US subsidy splurge”, Financial Times.

118) 프랑스 출신 산업전략 담당 세주르네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산업수장으로 경제·산업 변형 및 산업 전략을 담당하며 통상총국도 관장

119) KBA Europe(2024.12.3.), “세주르네 산업 정책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 ‘유럽 우선주의’ 전략 제안”, 한국무역협회.

- 기존 ‘그린딜(Green Deal)’은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로 전환하여, 친환경 기술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기후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산업경쟁력 제고 달성 도모
- ‘청정산업딜’의 일환으로 입법 예정인 ‘산업 탈탄소화 가속법(Industrial Decarbonization Accelerator Act)’을 통해 친환경 인프라 및 기술 투자 촉진 가속화 전망
- 규제완화와 보조금 지원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나, 1기 집행위의 반도체법 등의 추진에서도 목표한 재원마련에 실패해 막대한 재원 마련과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의 국내 정치 상황 등 부정적인 변수 극복도 관건
- ‘24.9월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EU 경쟁력 보고서’를 통해 연간 8,000억 유로 규모의 신규 투자 및 반도체 관련 허가·투자장벽 등 규제절차 완화 요구¹²⁰⁾
- 특히, 국경 간 투자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자본시장연합(Capital Markets Union, CMU)의 구축과 은행의 자금 조달 능력 제고를 위한 은행연합(Banking Union)의 도입을 촉구한 바, 이러한 요구는 2기 정책 의제에 반영될 예정¹²¹⁾
- 엔리코 레타 전 이탈리아 총리 역시 지난 ‘24.4월, ‘EU 단일시장 미래에 관한 보고서’에서 유럽의 제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각 회원국이 기금을 조성해 범EU 차원의 정부 보조금 지원 메커니즘을 도입할 것을 제안¹²²⁾한 바 있음
- EU 차원의 적극적인 산업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타국의 보조금 부과에 대해서는 관세부과, 투자제한조치, 역외보조금 규정(FSR)·반보조금 규정 등 방어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견제에 나설 전망
- EU는 타국의 보조금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WTO 규범에 합치하는 조치를 취해왔으나, 최근 이례적으로 업계 제소 없이 집행위 직권으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게시한 끝에 ‘24.10월, 최고 45.3%의 고율 관세 부과¹²³⁾
- 또한, ‘23.7월부터 역외보조금 규정(FSR)의 발효로 역내산업 보호수단이 한층 확대되었으며, 폰데어라이엔 2기에서는 상계관세 대비 빠른 집행 속도·직접적 규제 가능·집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 부과 등의 이점을 바탕으로 규정 적용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¹²⁴⁾

120) 성유진(2024.11.22.), “규제 천국 EU마저… “산업 전략 다 바꿔야”, 조선일보.

121) 한아름(2024.12.19.), op.cit.

122) 레타 전 총리, 유럽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EU 차원의 공적자금 창설 필요성 강조, KBA Europe.

123) 이정아 외 2(2024.8.22.), op.cit.

124) 한아름(2024.12.19.), op.cit.

[표]

표1. 美 행정부별 경제안보 정책 추진 현황	p.1
표2.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조치	p.1
표3. 폰 데어 라이엔 1기 통상정책 및 주요 입법	p.4
표4. 폰 데어 라이엔 2기 통상정책 방향	p.5
표5. 미국의 추가 관세조치 근거	p.7
표6.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위협에 대한 주요국 대응 현황	p.10
표7. 2024년 전 세계 對韓 수입규제 신규조사 개시 현황	p.12
표8. 주요 산업별 중국의 공급과잉 현황	p.16
표9. 중국 및 주요 지역의 수출 물량·단가 증가율	p.18
표10. 2024년 9월 이후 중국 경기부양책 주요 내용	p.19
표11. 미국의 주요 대중국 제재 내용	p.20
표12. EU 역외보조금 관련 심층조사 사례	p.21
표13. 중국 공급과잉에 대한 신흥국의 대응	p.22

[그림]

그림1. 폰 데어 라이엔 1기와 2기 통상정책 변화	p.4
그림2. 러-우 전쟁 경과 및 전망	p.6
그림3. 中 산업 정책 지출 내역 및 비중	p.15
그림4. 中 상장기업 대상 직접보조금 지급 추이	p.15
그림5. 중국 부동산 가격지수 추이 (YoY%)	p.17
그림6. 중국 소비자신뢰지수 추이	p.17
그림7. 세계 GDP 대비 주요국 제조업 무역수지 (1963~2023년)	p.18
그림8. 최근 중국의 무역수지 규모 (2011~23년)	p.18
그림9.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 조치에 따른 중국의 대응	p.27
그림10. 2024년 연방 상·하원 선거 결과	p.33

[참고]

참고1. 특별시장상황(PMS) 주요 내용	p.13
참고2. 트럼프 당선인 정권 인수팀의 전기차 관련 권고 내용	p.31
참고3. 트럼프 2기 행정부 내각의 제조업·산업정책 관련 언행	p.32

참고자료

[국내 문헌·기사]

- 권숙희(2024.11.7.), “中전문가들 “트럼프, 대중국 협상카드로 대만 활용 우려””, 연합뉴스.
- 김경숙, 홍건식(2023.12.),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통제와 시사점”, INSS 전략보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김나을(2024.5.6.), “중국의 대미국 우회수출 추이 분석: ADB MRIO를 중심으로”, 트레이드 포커스 Vol.19, 한국무역협회.
- 김민배(2024.6.), “첨단기술의 보호와 투자규제”, 전략물자관리원 학술지 통권 제7호.
- 김철문(2024.11.7.), “대만, 국가안보회의 개최...미중 포함 3자관계 변화 대응 모색”, 연합뉴스.
- 김혁중·오종혁·권혁주(2023.12.),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확대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 KIEP 연구보고서 23-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해지(2024), “IEA의 세계 전력시장 분석과 전망(2023-2026년)”, 포커스 24-05호, 에너지경제연구원.
- 도원빈(2024.7.23.), “중국의 저가수출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트레이드 브리프 Vol.8, 한국무역협회.
- 박가현 외(2022), “주요국의 핵심광물 확보전략과 시사점”, 트레이드 포커스, 2022년 32호, 한국무역협회.
- 박정한(2024.11.5.), “세계 석유시장, 2025년 공급과잉 사태 직면”, 글로벌이코노믹.
- 박태호(2024.11.), “트럼프 대통령 2기 세계경제전략 및 산업통상정책과 한국의 대응”, NEAR 재단.
- 법률신문(2024.7.), “美 재무부,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규칙 제정안 공지”, 법률신문.
- 법무법인 세종(2024.4.25.), “미 대선 “트럼프 재집권”시 우리 기업의 미국 비즈니스에 미칠 영향: 對 미국 전기차/배터리 투자 및 무역 정책을 중심으로,” 법률신문.
- 벤슨 우(2024.12.14.), “3대 新산업 밀어붙이는 중국...”중국의 일본화 우려는 과도”, 조선일보..
- 성유진(2024.11.22.), “규제 천국 EU마저... “산업 전략 다 바꿔야””, 조선일보.
- 손서원, “EU는 그린딜에서 청정 산업 딜로”, 삼성증권
- 산업부(2023.2.27.), “첨단산업 글로벌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광물 확보전략”, 산업부 보도자료.
- 이본영(2023.9.19.), “트럼프 “난 대만 방어 약속 안 해”...미 대선에 출령이는 국제 질서”, 한겨레.
- 이정아 외 2(2024.8.22.), “중국 공급과잉에 대한 주요국 대응 및 시사점”, 통상리포트 Vol.8, 한국무역협회.
- 이정아·도원빈(2023.9.6.), “미국과 EU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 통상리포트 Vol.8, 한국무역협회.
- 이지원(2024.11.7.), “방위비 압박에 반도체 투자 요구까지... “대만정책 변화 클 것””, 아주경제.

- 이진원(2024.2.5.), “값싼 중국산 태양광 패널 공습에 美·유럽 업체 생존 위기”, ESG경제;
에너지경제신문(2024.1.30.), “중국, 재생에너지 설비 화력발전 추월... 한국에 크게 앞서”, 에너지경제
- 이한나(2024.11.15.), “트럼프는 러시아·우크라전을 어떻게 끝낼까?”, 주간조선.
- 이효진(2023.7.14.), “중국의 갈륨 및 게르마늄 수출통제 배경 및 전망”, 동향 세미나, 중국전문가포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장영욱 외(2024), “2024~29 EU 집행위원회 정책 의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세계경제포커스, Vol.7 No.3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전보희·박소영(2024.3.5.), “2024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산업 정책방향과 시사점”, 트레이트
- 정예지, 윤인구(2024.8.28.), “주요국의 자국산업 보호 정책 현황과 전망”, 국제금융센터.
- 정의길(2024.11.7.), ““24시간 안 종전” 장담 트럼프...우크라, 가자 전쟁 전환 맞나“, 한겨레.
- 주원 외(2024.11.7.), “「트럼프 노믹스 2.0」과 한국 경제”, 경제주평 24-18, 현대경제연구원.
-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2024.11.7.),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통상리포트 Vol.12, 한국무역협회.
- 한아름(2024.6.10.), “미 의회 대중국 견제 입법 동향 및 시사점”, 통상리포트 Vol.5, 한국무역협회.
- 한아름(2024.12.19.), “폰테어라이엔 집권 2기 EU 통상정책 : 심화되는 美·中 경쟁 속 생존 전략”, 통상리포트
Vol.13, 한국무역협회.
- KBA Europe(2024.12.3.), “세주르네 산업 정책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 ‘유럽 우선주의’ 전략 제안”, 한국무역협회.
- KOTRA(2024.11.) 체계, 절차, 대응 방식 중심으로 이해하는 중국 수출관리제도“, KOTRA.

[해외 문헌·기사]

- Agnolucci, Paolo and Makarenko, Nikita(2024.11.5.), “Growing oil supplies amid moderating demand and geopolitical uncertainty: What lies ahead for oil?”, World Bank Blogs.
- Bade, Gavin and Benjamin Guggenheim(2024.11.7.), “Trump world, Congress discussing how to raise tariffs by legislation,” Politico Pro.
- Bade, Gavin and Sam Sutton(2024.10.10.), “Trump promises to ‘revolutionize’ auto industry in pitch to Michigan voters”, Politico.
- Baskaran, Gracellin and Schwartz, Meredith(2024.12.4.), “China Imposes Its Most Stringent Critical Minerals Export Restrictions Yet Amidst Escalating US-China Tech war”, CSIS.
- Bickenbach, Frank, et al.(2024.4), “Foul Play? On the Scale and Scope of Industrial Subsidies in China, Policy Brief”, KIEL.

- Boullenois, Camille and Charles Austin Jordan(2024.6.18.), “How China’s Overcapacity Holds Back Emerging Economies”, Rhodium Group.
- Covington(2024.11.25.), “Trade Policy Under a Second Trump Administration and Implications for Business”.
- DiPippo, Gerard(2022.5.23.), “Estimating Chinese Industrial Policy Spending in Comparative Perspective”, CSIS.
- Dlouhy, Jennifer(2024.11.1.), “If Trump Wins, Climate Diplomats Are Ready to Bypass US Role”, Bloomberg.
- Eaton, Collin and Benoît Morenne(2024.10.6.), “Big Oil Urges Trump Not to Gut Biden’s Climate Law”, The Wall Street Journal.
- EIA(2024.11.26.), “U.S. Crude oil production established a new record in August 2024”, EIA.
- European Commission(2023.1.2.), “A Green Deal Industrial Plan for the Net-Zero Age”, European Commission.
- European Commission(2024.6.25.), “EU prolongs steel safeguard measure until June 2026”, European Commission.
- European Commission(2024.7.18.), “Statement at the European Parliament Plenary by President Ursula von der Leyen, candidate for a second mandate 2024–2029”, European Commission.
- European Parliament(2017.10.24.) “Report on the EU–Africa strategy: a boost for development; EuroGeoSurveys, ”EU Latin American Partnership on Raw Materials”, European Parliament.
- Evans, Simon, et al.,(2024), “Analysis: Trump election win could add 4bn tonnes to US emissions by 2030”, CarbonBrief.
- Ferris, David(2024.11.25.), “Auto industry asks Trump to keep EV tax credits”, Politico.
- Fleming, Sam(2023.1.18.), “EU makes green pitch to rival US subsidy splurge”, Financial Times.
- Francois, Chimits(2023.7.), “What Do We Know About Chinese Industrial Subsidies?”, CEPPII.
- Gerard, DiPippo, et al.(2022.5.), “Red Ink: Estimating Chinese Industrial Policy Spending in Comparative Perspective”, CSIS.
- Glaser, Bonnie(2021.12.7.), “How China Uses Economic Coercion to Silence Critics and Achieve its Political Aims Globally”, GMF.
- Gramlich, John(2021.1.13.), “How Trump compares with other recent presidents in appointing federal judges”, Pew Research Center.

- Hawkins, Ari(2024.10.28.), “Biden administration finalizes rule on investments in China”, Politico Pro.
- Hawkins, Ari(2024.12.10.), “Biden administration prepares final round of China tech trade restrictions”, Politico.
- Holland, Steve et al(2024.12.18.), “Here’s what we know about Trump’s planned executive orders so far,” Reuters.
- Hoskins, Peter(2024.5.20.), "China hits back at US and EU as trade rows deepen", BBC.
- IEA(2024), “Electricity Mid Year Update–Executive summary”, IEA.
- IEA(2024), Oil Market Report–November 2024, IEA.
- Iguchi, Kosuke(2024.11.20.), “Japan sees rise in steel anti–dumping probes amid China overcapacity,” Nikkei Asia.
- Jacobs, Justin et al(2023.1.24.), “Europe needs its own Inflation Reduction Act”, Financial Times.
- Laing, Keith et al.(2024.12.12.), “Trump’s Push to Eliminate EV Tax Credits Hits GOP Lawmakers’ Home States”, Bloomberg.
- Laing, Kieth(2024.12.12.), “Trump’s Push to Eliminate EV Tax Credits Hits GOP Lawmakers’ Home States”, Bloomberg.
- Leonard, Jenny(2024.10.16.), “In Trump’s Economic Plan, Tariff Is the Most Beautiful Word.”, Bloomberg.
- Meltzer, Joshua P. (2024.12.3.), “Assessing Trump’s proposed 25% tariff on imports from Mexico and Canada,” Brookings.
- Picon, Andres(2024.12.5.), “Musk, on Capitol Hill, says ‘get rid of all credits’”, Politico.
- Raymond, Nate(2024.11.8.), “Trump readies to name ‘fearless’ conservative judges in second term”, Reuters.
- Reid, Tim and Gram Slattery(2024.9.25.), “Trump pledges to take jobs and factories from allies, China”, Reuters.
- Ren, Daniel and Yujie Xue(2024.11.14.), “China’s 10 millionth EV rolls out, as makers set sights on exports to digest overcapacity”, SCMP.
- Renshaw, Jarrett and Chris Kirkham(2024.12.17.), “Exclusive: Trump transition team to roll back Biden EV, emissions policies”, Reuters.
- Reuters(2024.11.16.), “Explainer: What happens when Russian gas to Europe via Ukraine stops?”, Reuters.

- Schonhardt, Sara(2024.11.10.), "Why Trump's 2nd withdrawal from the Paris Agreement will be different", Politico.
- Setser, Brad W, et al.(2024.3.10.), "China's Record Manufacturing Surplus", CFR.
- Simon Lester(2024.10.6.), "Preliminary U.S. CVDs on Solar Products from Southeast Asian Countries Target Chinese Production; First Ruling on Transnational Subsidies," China Trade Monitor.
- Swanson, Ana(2024.12.16.), "Biden Prepares to Target Chinese Legacy Chips With Trade Investigation," The New York Times.
- Swanson, Ana(2024.11.23.), "Trump's Trade Agenda Could Benefit Friends and Punish Rivals," The New York Times.
- Telling, Oliver, et.al.(2024.6.3.), "Chinese businesses target Vietnam and Mexico as trade tensions with US rise", Financial Times.
- Woodmackenzie(2024.5.1.), "China leads global wind turbine manufacturers' market share in 2023", Woodmackenzie.
- WTO(2024.11.19.), "Trade Policy Review: China", WTO.
- Yoko Kubota and Clarence Leong(2024.4.28.), "Why China Keeps Making More Cars Than It Needs", The Wall Street Journal.

[법안 및 정부 관련 문서]

-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2024.12.30.), "Initiation of Section 301 Investigation; Hearing; and Request for Public Comments: China'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Targeting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for Dominance," 89 FR 106725.
- U.S. Commerce ITA(2024.3.25.), "Regulations Improving and Strengthening the Enforcement of Trade Remedies Through the Administration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Laws", 89 FR 20766.

<2025년 KITA 통상리포트 발간 목록>

No.	제목	작성자	발간일자
1	2025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 험난한 風波, S.T.O.R.M.에 대비하라!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25.01.13



KITA

TRADE REPORT

2025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